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6 2021
Vol. 54

Growth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June. 2021

VOL. 54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68

제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04

재정 INSIGHT

04 KPFIS 인사이트

· 코로나 시대 재정운용을 둘러싼 쟁점 10선
심혜인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8 재정칼럼

·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22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 차이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



24

재정 NOW

- 24**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30**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결산
- 36** 키워드 재정
 소재
- 40** 해외재정동향
 OECD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
- 46** Data for All
 데이터 축적과 바꾸쳐



48

재정 STORY

- 48** 이달의 재정 이야기
 연금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 52** 정부재정통계변천사
 경제개발계획의 집행: 재정투융자와 경제기획원
- 58**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페르메이르의 〈음악 수업〉과 중산층의 삶
- 62** 경제철학 이야기
 집단행동론의 개척자, 맨슈어 올슨
- 66** 재정 캘린더
- 68**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 71** 애독자 코너

코로나 시대 재정운용을 둘러싼 쟁점 10선

심혜인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hyein@kpfis.or.kr)



나라살림에 관한 정보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통계플랫폼 「열린재정」에 상세하게 공개된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에 대한 해석은 정치권, 언론, 전문가에 따라 제각각이다. 특히 코로나19에 정부가 유례없는 확장재정으로 대응하면서 △재정대응의 적절성 △효과 △추가 대응 여력 등 재정운용을 둘러싼 담론이 분출하고 있다. 보편·선별 논쟁과 손실보상금 소급도 공방이 오가고, 나랏빚을 둘러싼 △규모 △증가속도 △공기업 부채 등도 논쟁의 연료들이다. 국민들은 “전국민 1인당 1억원씩 빚을 진 게 사실인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어떻게 다른지”, “자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 장단점은 무엇인지” 헷갈린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유일한 재정 월간지인 「나라재정」은 재정운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10가지를 간략하게 추려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재정칼럼(p.18)과 인터뷰(p.48)도 나랏빚에 대한 내용으로 잡았다. -편집자 주-

① (재정확대 충분했다) “전쟁 중 비용 아껴” vs “가성비 높게 집행해 두 마리 토끼”

잘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는 그 규모에서든 위기의 전파경로에서든 전대미문이었다. 대응 메뉴얼이 있을 리 없었고, 각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첫 번째 정책권고는 재정 확대였다.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신속하게 풀고,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풀라는 것이다. 각국은 뒷감당을 생각할 새 없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었다. 보통은 경제위기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조합(policy mix)으로 맞서지만 이번 경제위기에서 재정의 역할은 축구로 치면 거의 ‘원톱’ 수준이었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중시하고, “경제회복 속도도 재정 투입 규모에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면서 ‘재정정책 우위(fiscal dominance)’라는 단어가 시사상식으로 등장할 정도였다.

우리나라도 지난해와 올해 모두 5차례 추경을 통해 대응했다. 정부는 ‘과감하게’ 풀었다고 설명하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 투입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4.5%다. 10%를 훨씬 웃도는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G20 회원국 중 14위 수준이다. 적게 풀었으니 당연히 재정수지 적자폭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고¹,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표 1〉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현황 종합

	2020년 1차 추경 (2020.3.17.)	2차 추경 (2020.4.30.)	3차 추경 (2020.7.3.)	4차 추경 (2020.9.22.)	맞춤형 피해지원 (2020.12.29.)	2021년 추경 및 맞춤대책 (2021.3.25.)
지원 규모	11.7조원	14.3조원	35.1조원	7.8조원	9.3조원	19.4조원
지원 인원	1,100만명+α	전국민	930만명+α	1,330만명	580만명	820만명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4.1.)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정당국을 향해 “전쟁 중에 비용 아낀 게 자랑이냐”라든가 “재정건전성을 민생안정성 보다 중요시하는데 누구를 위한 재정이냐” 등의 비판이 부쩍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손실보상금 소급 여부 등 재정 규모가 동반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라고 몰아붙인다.

물론 정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성공적인 방역으로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비교적 잘 제어한 덕분에 덜 풀었을 뿐, 부족하게 푼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재정투입이 충분했는지 여부는 경제회복 정도나 속도로 판단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반박 근거다. 때문에 정부는 “돈을 최대한 가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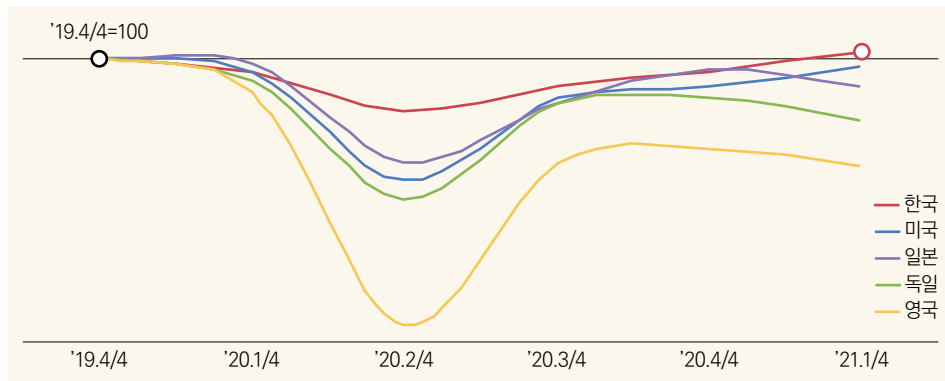
¹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한국은 2019년 42.2%에서 2020년 48.7%로 6.4%p 늘어난 반면, 선진국 평균은 2019년 103.8%에서 2020년 120.1%로 16.3%p나 증가했다(IMF, 2021.4.).

높게 집행한 덕분에 주요국 대비 훨씬 적은 재정투입으로 역성장폭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한다.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2020년 성장률을 -1.0%에서 방어했다. 우리보다 돈을 훨씬 많이 푼 미국(-3.5%), 일본(-4.8%), 영국(-9.9%) 등은 물론 선진국 평균(-4.7%)에 비해 훨씬 좋은 성적이다. IMF, OECD 등도 한국의 재정운용에 후한 점수를 주는 편이다².

② (재정투입 효과는) “경제지표 전반에 온기” vs “기저효과 불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를 올 1분기에 이미 회복했다.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한 나라는 주요 10개 선진국 중 한국이 첫번째다. 회복 속도도 빠르다. OECD는 지난달 말 발표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3.8%로 올렸다. 2021년 3월에 3.3%라고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불과 두 달 만에 0.5%p나 상향 조정한 것이다. 세계경제 전체가 회복 중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기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0.2%p 올리고, 주요국은 0.1%p만 올린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일본이나 프랑스는 오히려 내렸다. 2020년과 2021년을 묶어 ‘위기 기간 평균성장률’을 따져봐도 G20 선진국 중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이다³. OECD는 한국이 내년에도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robust and stable economic growth)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10가지 중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1번으로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우리나라 GDP 규모는 지난해 12위에서 10위로 2계단 상승했다.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한 것도 처음이다.

〈그림 1〉 주요 선진국 GDP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5.31.)

² IMF. (2021.1.). “포괄적인 재정·통화·금융조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

OECD. (2021.5.). “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절했고, 피해계층 중심으로 마련된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

³ 미국 1.7% > 한국 1.5% > 호주 1.3% > 캐나다 0.4% > OECD 평균 0.3% > 독일 -0.9% > 일본 -1.1% > 프랑스 -1.2% > 영국 -1.3%

KDI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경기회복’이란 단어를 5~6월 연달아 사용했다. “소비, 수출,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보인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봐도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6%나 증가해 신기록을 달성했다. 1분기 기준 경상수지 흑자폭은 역대 3위였고, 산업생산이나 소매판매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고용도 지난해 내내 감소하다, 올해 3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⁴. 그러다보니 한국은행을 비롯해, 올해 성장률을 4%대로 올려잡는 전망도 많아졌다.

반면 올해 우리 경제지표가 기지개를 켜는 이유를 “기저효과 때문”으로 평가하는 주장도 많다.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출 증가도 “백신보급으로 미국·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내수와 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취업자 수가 증가해도, 취업의 질은 논란거리다. 계층 및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벌어졌다. 경제지표상의 온기가 무엇 때문이든, 그 온기가 피부로 체감되지 못하는 셈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탓에 대면·밀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업은 정부의 재정확대 혜택이 제한된다는 점과, 재정지출이 실물경기 회복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통화량만 늘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지적도 정부로서는 뼈아프다.

③ (추가투입 여력은) “추경 여력 충분” vs “재정건전성 강화할 시점”

지난 3월 추경편성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추가 재정투입 공방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일부 언론과 야당 등에서는 “지난 4년간 나랏빚이 300조원 늘었는데도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재정당국도 일단 추경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1~4월 세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원⁵이나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경은 규모와 용처가 문제일 뿐 여



⁴ 2021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61.9만명 늘어난 2,755만명이다(통계청, 2021.6.).

⁵ 1~4월 세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32조원 증가했다(기획재정부, 2021.6.).

야 모두에서 빠르게 공식화됐다. 재정당국도 ‘추가세수 범위 안에서’라는 규모와 재난대책 및 취약·피해계층 지원이라는 쓰임새를 단서로 달아 추경 편성으로 돌아섰다. 적자국채 발행이나 전국민 지급 등에 반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일 슈퍼 추경을 거론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피해계층 지원,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소요내역에 대한 추측도 무성하다.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선 “추가세수는 국민에게 돌려줘야지 정부가 갖고 있으면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단골 논리다. 저금리 기조 덕분에, 국채를 발행해도 재정건전성에 미칠 부담이 작은 것도 장점이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보다,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더 해롭다는 주장도 있다. 이른바 ‘착한 국가부채론’이다. 이는 “나랏빚을 많이 내서라도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시점”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는 지난 5월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저금리로 부채조달비용이 안정적 수준이니만큼 한국의 부채 여력(debt affordability)은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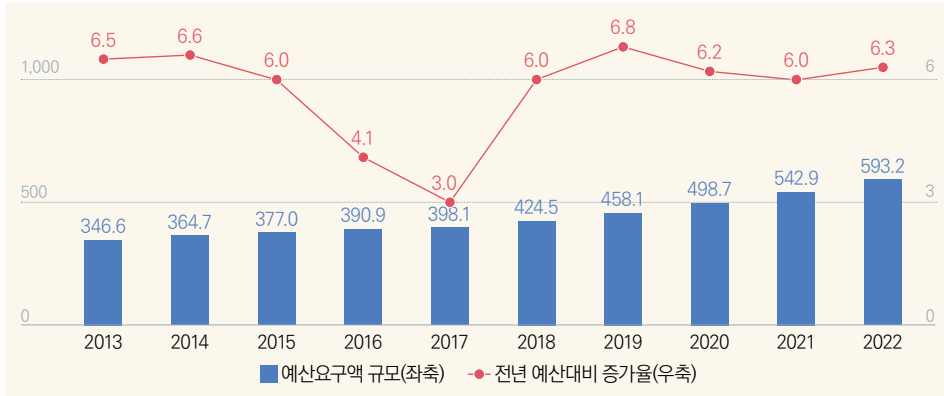
하지만 “올해 초과세수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세입전망을 과소추계했기 때문이지 경제회복에 따른 세입증가, 즉 선순환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설명도 많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납부를 연기해줬던 세금, 증시 및 부동산세 증가분, 삼성가 상속세 등에 따른 착시효과를 거론하기도 한다. 올해 초과세수는 특수한 사정에서 생긴 일회성 세수, 우발적 세수라는 것이다. 아울러 추가세수의 쓰임새도 나랏빚을 갚아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쪽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은 대외 신용도 하락 및 투자 감소를 야기해 성장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회복 기대감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자율 상승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정부채권에 대한 수요가 훨씬 제한적이므로 국가채무비율을 기축통화국과 수평 비교하여 재정 여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OECD 내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할 경우 결코 크게 양호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여론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초과세수로 추경 편성하는 것 이외에 나랏빚 상환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추경과 별개로 내년 총지출 규모를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5월 2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593.2조원이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6.3%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예년 수준이다. 재정당국은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내게 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한시적 증액사업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큰 폭의 여유재원을 확보한 뒤 그 돈을 포용·혁신 분야에 재배분하겠다고 밝혔다. 6월 2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출구조조

정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출연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림 2〉 우리나라 예산요구액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예산 요구 현황 보도자료, 각 연도

④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보편지급으로 내수활성화” vs “같은 돈이면 선별로 두텁게”

추경이 공식화되면서 ‘보편 vs 선별’ 논쟁이 또 불붙었다. 보편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별도의 기준설정 등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없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 차별 논란, 경계선 탈락자들의 불만, 소득역전 등의 우려가 없다. 반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집중되어야 할 재정이 상위계층의 여가생활이나 생활비 ‘덤’으로까지 분산되는 단점이 있다. 한편, 선별지원 방식은 피해가 큰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보편지원 방식에 비해 재정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수혜자 소득수준이 낮아 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대상자 기준설정 및 선별과정에 많은 시간과 행정비용이 들어, 적시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국민 여론도 찬반이 팽팽하다⁶.

여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 정도에 이르는 9월쯤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두텁게 맞춤형 선별지원을 하자는 입장에 무게가 실려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답변 등에서 “같은 돈이라면 아래 계층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절했다(appropriate)’고 평가하면서, “견고한 성장경로로 복귀할 때까지 피해계층에 집중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⁶ 리얼미터 조사(2021.6.): 보편지급 38%, 선별지급 33%.
한국갤럽 조사(2021.6.): 선별지급 38%, 보편지급 37%.

⑤ (손실보상금 소급) “소급적용이 헌법상 의무” vs “중복·입증문제로 곤란”

코로나19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도입이 소급적용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올 초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는 대신 소급적용은 없는 것으로 뜻을 모았으나, 지난달 여당 의원들이 소급적용 논의를 다시 꺼내 들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찬반 논리가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생존권을 걸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라고 주장한다. 재산권을 제한했으므로 공공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 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과 관련하여 지원과 보상은 엄연히 다른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소급적용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중복 우려다. 이미 4차례에 걸쳐 총 26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중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1,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액 산출의 어려움, 손실이 코로나19 타인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 입증불가, 막대한 행정비용, 재원, 소급적용 시 위헌 논란 등도 반대 이유다.

여당은 이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소급효과를 갖는 ‘피해지원’ 방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6일 상임위 법안소위에 넘겼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 정부, 소상공인 등의 입장이 여전히 다르다. 법안 형태(개정법·특별법), 범위, 대상, 시기, 기준 등이 세밀한 법안과 정책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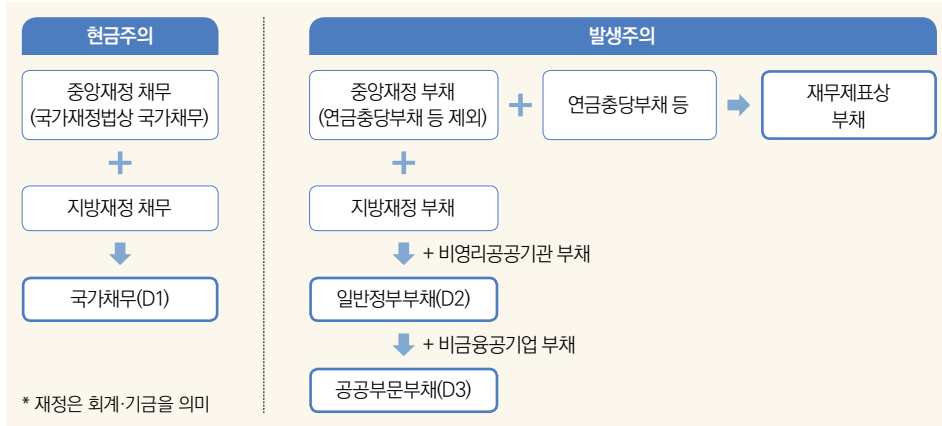
⑥ (나랏빚 얼마) “국가부채 2,000조” vs “국가채무 850조”

매년 4월초가 되면 국가결산서를 근거로 “나랏빚 사상 최대” 혹은 “국민 1인당 얼마” 등의 보도가 쏟아지고, 정부는 “나랏빚(국가채무)과 국가부채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한 뉴스”라고 반박하는 일이 되풀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빚이 크게 늘면서 논쟁이 커졌다. “나랏빚이 2,000조원에 육박한다”거나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GDP를 추월했다”는 내용이었다. 국가·기업·가계 채무를 단순 합산한 뒤 “빚이 5,000조원이 넘으니 국민 1인당 1억원 씩”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1,985조원은 재무제표상 부채이며,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와는 아예 개념이 다르다”고 반박한다⁷. 재무제표상 부채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나랏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상환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만을 나랏빚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D1)는 2020년 결산 기준 846.9조원이다⁸.

〈그림 3〉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 차이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6.)

매년 이런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은,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확정 부채(1,264.1조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액이 연금충당부채(1,044.7조원)이기 때문이다. 총 부채의 절반 이상이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공직자·군인 재직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채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⁹. 실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연금충당부채는 국제비교 기준의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재무제표에 포함해 발표·관리하는 나라는 13개국뿐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산출해 공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뿐이다¹⁰. 하지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정부의 지급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직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털 내고 더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다,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넓은 의미의 나랏빚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나아가 비금융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⁷ 일반적으로 채무(debt)는 현금주의 방식의 개념으로 계약에 따라 지출이 확정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며, 부채(liability)는 발생주의 방식의 개념으로 불확실하지만 미래 발생 가능한 부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020년 결산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는 1,981.7조원이나, 4월 국무회의 심의·의결 당시에는 1,985.3조원으로 발표되었다.

⁸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중앙정부)’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의 두 가지 지표가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채무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과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월별로 발표되며, 이후 국가채무(D1) 산출 시 활용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채무로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며 연 1회 발표한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020년 기준 819.2조원이다.

⁹ 그 밖에 재무제표상 부채의 포괄범위에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생주의 방식으로 부채를 인식하므로 예수금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및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채무로 인식하지 않는 점도 구분된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하는 일반정부부채(D2)와 공공부문부채(D3)의 산출 시 활용된다. 일반정부부채(D2)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며, 공공부문부채(D3)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까지 포괄하여 산출한다.

¹⁰ 멕시코,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일본이 해당한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6.6.).

나랏빚 기준을 둘러싼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을 쓰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첫째, 국가채무(D1) 기준으로는 GDP 대비 44%에 그쳐 주요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둘째,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D2) 기준으로도 2019년의 경우 GDP 대비 42.2%다. 선진국(평균 103.3%) 대비 매우 양호한 편이다¹¹. 셋째, 이 일반정부부채(D2)에 다시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부채(D3)를 봐도, 발표국 7개국 가운데 2번째로 낮다¹². 넷째,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하는 주요국을 비교해봐도 GDP 대비 한국 91.1%, 미국 130.9%, 영국 213.6%, 일본 229.9% 등으로 한국이 제법 낮은 편이다.

〈표 2〉 우리나라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구분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2011년		420.5	30.3	459.2	33.1	753.3	54.2
2012년		443.1	30.8	504.6	35.0	821.1	57.0
2013년		489.8	32.6	565.6	37.7	898.7	59.9
2014년		533.2	34.1	620.6	39.7	957.3	61.3
2015년		591.5	35.7	676.2	40.8	1,003.5	60.5
2016년		626.9	36.0	717.5	41.2	1,036.6	59.5
2017년		660.2	36.0	735.2	40.1	1,044.6	56.9
2018년		680.5	35.9	759.7	40.0	1,078.0	56.8
2019년		723.2	37.7	810.7	42.2	1,132.6	59.0
2020년		846.9	44.0	-	-	-	-

주: 2020년 일반정부부채(D2)와 공공부문부채(D3)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2021.12.) 확정 발표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아울러 국가, 기업, 가계의 빚을 합쳐 “국민 1인당 빚이 얼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부족하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국가채무만 따져도 외평채·국민주택채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가 약 40%인데, 이는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기업 부채는 부담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기업법인인데다, 기업이 가진 금융자산이 부채마다 많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2019년 말 37.2조원에서 2020년 말 163조원으로 오히려 더욱 건실해졌다. 가계부채 역시 증가속도는 빠르지만 연체율이 2019년 0.26%에서 2020년 0.20%로 낮아졌다. 신용이 좋은 고신용자 위주로 부채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빚이 소비·투

¹¹ 2019년 주요국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미국 108.2%, 일본 234.9%, 독일 59.6%, 프랑스 98.1%, 영국 85.2%, 이탈리아 134.6%, 캐나다 86.6%, 호주 63.1% 등이다(IMF database).

¹² 7개국의 공공부문부채(D3) 비율은 멕시코 47.5%, 한국 59.0%, 호주 79.9%, 영국 89.7%, 캐나다 117.5%, 포르투갈 126.2%, 일본 253.6%이다(IMF database).

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⑦ (국가부채) “주요국보다 매우 적어” vs “증가 속도가 더 문제”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는 지난 5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기존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장기간 유지 해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을 시험(testing the long-established track record of fiscal discipline)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¹³. 이는 곧바로 큰 논란을 촉발했다. 대외신인도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사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부채는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부채 논쟁이 일 때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설명한다. 실제 IMF가 지난 4월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발표한 전망치 기준, 한국의 2020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48.7%로, 선진국 평균인 120.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G20 평균은 130.8%, 유로지역 평균은 96.9%다. ‘현 정부 부채급증론’에 대해서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제외하고 따지면 사실 역대 정부의 집권 초기 3년간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현 정부가 제일 양호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¹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증가했을 뿐이며, 그럼에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반박 목소리도 크다.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정부채권에 대한 수요가 훨씬 제한적이므로 단순히 기축통화국이 다수 포함된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재정 여력이 풍부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견해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100~200%여도 감내할 수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는 90% 수준에서도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2019년 OECD 비기축통화국(13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평균 54.3%로 기축통화국 평균 98.2%의 절반 수준이다(김소영, 2021.2.).

부채 규모뿐 아니라 증가 속도에 대한 지적도 많다. 한국의 국가채무(D1) 비율은 2019년 말 37.7%에서 2021년 현재 48.2%(1차 추경 포함)로 불과 1년 반 만에 약 10%p 급증했다. 한국은 위기상황이 아닐 때에도 추경을 편성하며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IMF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통계에 따르면 2000~2019년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D2)는 연평균 11.1% 늘어 OECD 37개국 중 6번째로 빠르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적 특징도 국가부채 증가속도에 있어 큰 도전 요인이다. 당장은 선진국

¹³ Moody's, 'Strong fundamentals underpin Korea's resilient recovery and Aa2 rating', (2021.5.12.).

¹⁴ 정부별 집권 초기 3년 국가채무(D1) 비율 증가폭은 2008~2010년 2.9%p, 2013~2015년 3.1%p, 2017~2019년 1.7%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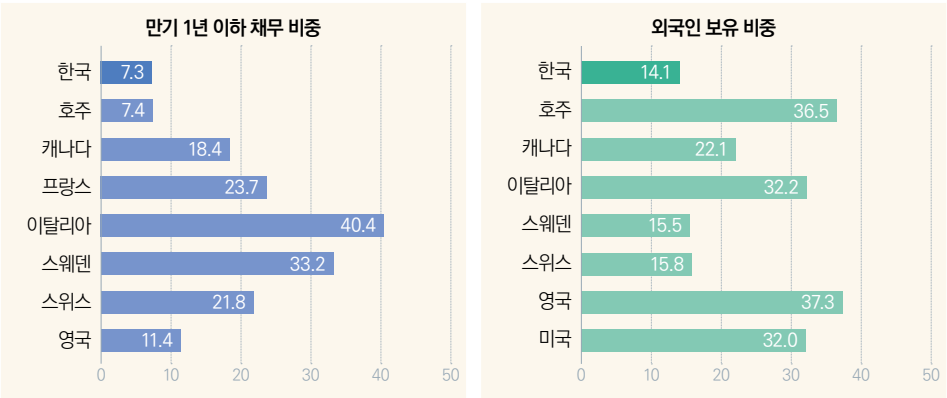
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낮아 복지지출이 적고 재정압박이 덜한 편이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30년 후 고령인구 비중은 세계 1위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나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국가부채 비율이 치솟을 수 있으니, 부채증가 속도에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⑧ (부채의 질) “채무 만기구조 양호” vs “적자성 채무 적신호”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부채의 총량뿐 아니라 질도 본다. 일반적으로 부채의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해 국가채무의 만기구조와 소유구조(외국인 보유 비중) 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평균만기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2년에서 9.7년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또한 한국의 외국인 보유 국채 비중은 14.1%로 해외 주요국 평균 25.7%에 비해 11.6%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외국인에게 진 빚이 다른 국가보다 낮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보다 통화가치 하락폭이 작을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부채의 질도 양호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이다.

〈그림 4〉 주요국 국가채무 만기구조 및 소유구조 비교(2019년)

(단위: 전년 대비, %)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0)

한편, 적자성 채무 증가로 인해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국가채무는 크게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조성 없어도 되는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자성 채무에 비해 훨씬 적다. 우리나라 적자성 채무는 2020년 말 51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05.4조원 늘어나며, 국가채무(D1)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6%까지 증가했다. 적자성 채무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5년 15.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까지 내려갔으나 2020년 다시 25.9%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이후 금융성 채무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채무 증가 못지않게 부채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무디스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등급인 만큼, 아직은 대외신인도가 양호한 편이다.

〈표 3〉 무디스의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2021년 5월 기준)

신용등급	국가명
Aaa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Aa1	핀란드, 오스트리아
Aa2	한국, 프랑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Aa3	영국, 벨기에, 체코, 홍콩, 마카오, 대만(+)
A1	일본, 중국,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A2	아일랜드, 폴란드
A3	페루, 말레이시아

주: 국가명 뒤 (+)는 “긍정적” 전망, (-)는 “부정적” 전망, 나머지는 “안정적”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5.12.)

⑨ (미국 테이퍼링) “자본이탈 트리거 되나” vs “급격한 이탈 없을 것”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긴축전환 조짐이 나오면서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¹⁵. 테이퍼 탠트럼이란 선진국이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돌입할 경우, 신흥국 내 유입돼 있던 자금이 선진국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금융발작현상을 말한다. 자금이 빠져나간 신흥국의 통화 가치와 증시는 급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이번 위기에서의 회복속도가 선진국과 신흥국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 조기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도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속도 차이(uneven recovery)를 올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선진국 금리상승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부채 증가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파산 우려 등의 금융리스크가 신흥국에 상존한다”는 것이다¹⁶.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6.5% 넘게 성장해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함께 높아진다. 이에 따른 금리 상승 불안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면 글로벌 자본시장에

¹⁵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본격화하면, 신흥국 내 글로벌 유동성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의 국제 금리가 상승하면 굳이 경제구조가 더 취약한 신흥국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진다.

¹⁶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1.5.).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저금리 기조로 정부와 민간 부채가 급증한 상태여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규모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히, 자칫 확장재정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발행을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경기회복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먼저 오르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반면, 급격한 자본유출은 기우라는 의견도 많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됐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은 전체 글로벌 자금 흐름의 50% 가까이 차지했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큰 유입이 없었다. 유입된 자금이 크지 않은 만큼 이탈될 자금도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기대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응수단 보유, 고용부진 지속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⑩ (공공기관 부채) “공기업 눈덩이 부채” vs “적정 수준에서 관리 중”

코로나19 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2020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 대비 3.4%(17.9조 원) 증가한 544.8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28.2%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공기업 부채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정부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주로 공사채 발행에 의해 부채를 조달한다는 점¹⁷도 자주 지적받는 사항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부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공기업이 갚을 능력도 없이 빚을 내니, 공기업 채무를 국가보증 채무에 포함해 공식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0년의 경우 공기업 36곳의 당기순손실이 6,000억원이나 난 것이 논란거리다. 방만 경영 탓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영향이 -4.2조원이나 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이익이 +1.1조원이나 되는 등 지난해의 특수한 사정을 제외할 경우 2020년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2.5조원으로 양호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마사회·강원랜드 등 레저공기업과 철도공사·SR·인천공항 등 여객운송공기업의 특수사정이 반영된 탓이라는 것이다. 실제 36개 공기업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19년 183.0%에서 2020년 182.6%로 미미하게나마 줄어들었

¹⁷ IMF & WorldBank(2021) 전망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5.8조원으로 GDP 대비 20.6%를 기록해 영국, 캐나다, 일본 등 기축통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황순주, 2020). 2019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389.0조원 중에서 238.5조원은 차입금 및 사채 등 외부차입금으로 총 부채의 61.5%에 해당하며, 외부차입금 중 사채(186.9조원)의 비율이 7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고, 영업이익은 7조원 흑자상태다.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를 낼 수 있는 수준인지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도 1.4%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철도·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다보니 주요국보다 공기업이 담당하는 범위가 넓어 부채 수준이 높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로 끌어안으면 공기업이 빚을 낼 때 오히려 국가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지급할 것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표 4〉 36개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 추이

(단위: 조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부채비율	181.5	177.6	178.3	183.0	182.6
영업이익	20.3	13.5	8.1	7.1	7.0
이자보상비율	3.7	2.7	1.5	1.3	1.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5.3.)

참고 문헌

- 감사원. (2021).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
-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19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
- 기획재정부. (2021).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 기획재정부. (202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 김소영. (2021).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 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 해외재정동향 및 이슈 분석, 조세재정연구원.
- 김유찬. (2020).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재정포럼, 조세재정연구원.
- 이환성 외. (2020).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과 설계, 이슈페이퍼 제94호, 한국행정연구원.
- 통계청. (2021). 「2021년 5월 고용동향」.
- 황순주. (2021).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KDI FOCUS, KDI.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2021.4.29.).
-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0.9.1.).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1.3.25.).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1.5.31.).
- 국가재무제표상 부채(1,985조원)는 국가채무와 다른 개념입니다, (2021.4.6.).
-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나랏빚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2021.4.6.).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 (2021.5.12.).
- 연도별 예산 요구 현황, 각 연도(2017~2022).
-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및 투자사업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4.20.).
-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5.3.).
- 정부는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를 포함한 채무지표를 다각적·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1.6.6.).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2021.4.1.).
- 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국제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1.6.2.).



국가재정, 이대로 관철은가?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shkang7@hanya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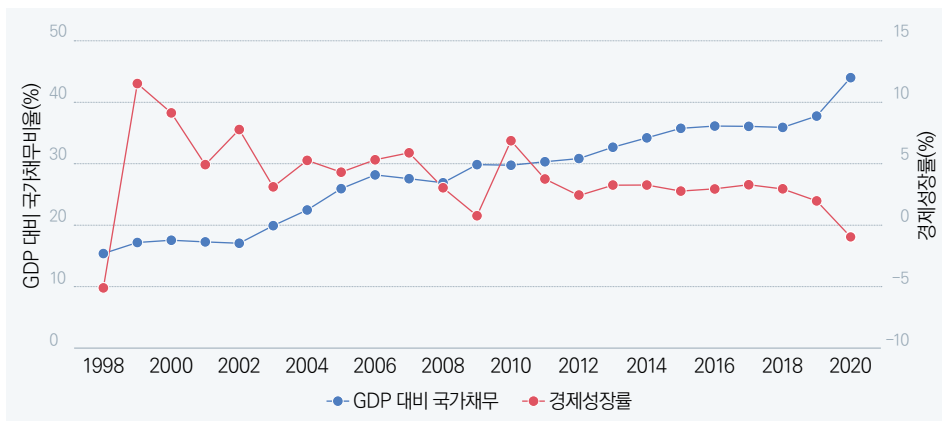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에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IMF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24년에 58.7%로 예측됐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더 큰 문제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2024년 기간 연평균 4.2%p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1997~2019년 기간 연평균 1.2%p과 비교하여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역시 최근 2019년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018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6조원(GDP 대비 -0.6%)이었으나, 이는 2년 만에 -112조원(GDP 대비 -5.8%)으로 재정적자 폭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걱정스럽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현상이 저성장 기조하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신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는 부채상환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저금리 기조하에서 그나마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해보이지 않지만,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경제성장률이 하락추세에 있는 상황에서는 낮은 이자율이 국가채무 증가를 정당화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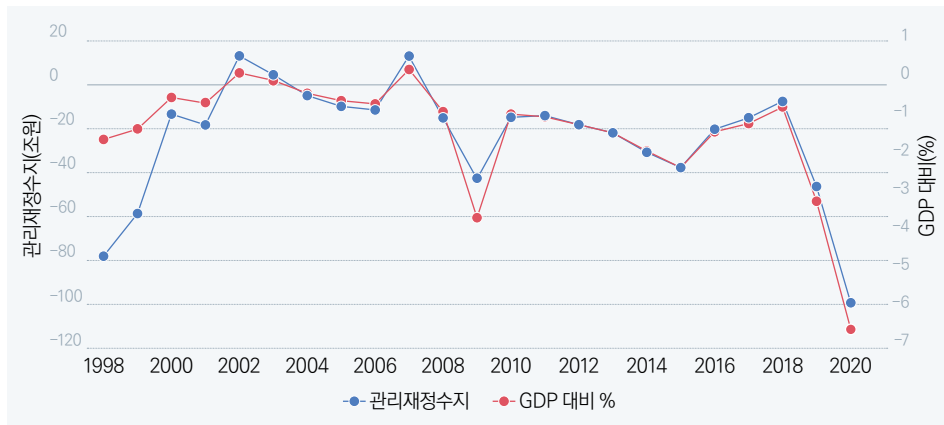
저성장 고부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재정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심지어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런 관점에서 ‘착한부채’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했다. 현재 국가채무 증가의 요인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와 ‘보편적 복지’ 정책기조하에서 재정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는 국가채무를 감소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장률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노옥(2020) 역시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 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 근거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채무 위기 발생 직전에도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현상이 관측됐다(Mauro and Zhou, 2019).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증가는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낮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Lian, et al, 2020). 둘째, 현재의 낮은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정부부채가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하지만,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은 현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넷째, 정부부채는 공식통계보다 더 클 수 있으므로 공식통계를 토대로 재정 여력을 과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근거들은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상황이라도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 책임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및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 관리재정수지 추이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출산율과 고령화에 대한 OECD 국가 통계를 보면 재정건전성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또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4.29%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OECD 평균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비율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빠르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국가채무 증가압력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경제 및 인구구조 전망을 고려해볼 때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OECD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향후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입 확보가 필요하지만, 세율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제학에서 래퍼커브 이론은 세율과 세수입 간의 관계가 역 U자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세율 증가가 세수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¹. 최근 세제개편을 살펴보면, 보편적 증세보다는 고소득자 및 고자산가를 타깃한 증세가 주된 기조이다. 래퍼커브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세수입 확보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고소득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고자산가의 세부담이 다른 경제주체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조하에서 조세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넓은 세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앞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신성장 산업은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근로자의 소득을

1. 래퍼커브는 Arthur Laffer 경제학자가 제시한 이론으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근로 등 경제활동의 저해로 인해 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증가시킨다. 소득의 증가는 소비 및 저축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내수 회복에 기여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이 증가할수록 수출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수 및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선순환은 결과적으로 과세대상 소득 및 이윤을 확대시켜 세율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큰 세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지금 국가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보편적 증세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조세저항 및 경제행위 왜곡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성장 동력 산업을 효율적으로 발굴 및 육성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박노옥,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 재정학공동학술대회, 재정학회.
- Paolo Mauro-Jing Zhou. (2019). “Can We Sleep More Soundly?”, IMF Working Paper.
- Weicheng Lian-Andrea F Presbitero-Ursula Wiriadinata. (2020). “Public Debt and r-g at risk”, IMF Working Paper.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 차이

정성호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위원(jazzsh@kpfis.or.kr)



국가채무(D1)=나랏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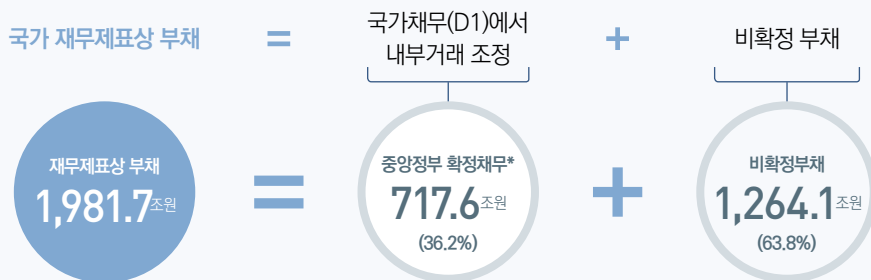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



*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2020년 결산 결과, 나랏빚은?

나랏빚은 846.9조원입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채무 범위를 ①국채 ②차입금 ③국고채무부담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91조②). 이 3가지를 더하면 **중앙정부 확정채무(2020년 기준, 819.2조원)**이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순채무(2020년 기준, 27.7조원)를 합치면 국가채무(D1, 나랏빚)입니다. 반드시 갚아야하는 빚이기 때문에, 영문으로도 빚(Debt)으로 표기합니다.



* 국가채무상의 중앙정부 확정채무(819.2조원)와 차이가 나는 이유: 발생주의 회계에 의한 차이조정 101.6조원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가 1,981.7조원인데?

재무제표에 부채가 1,981.7조원으로 표시돼 있으니, 이것을 나랏빚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부채(Liability)는 자산(Asset)에 대응되는 항목이지, 빚(Debt)이 아닙니다.

실제, 20년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 1,981.7조원 중에서 나랏빚은 **중앙정부 확정부채인 717.6조원 (36.2%)**입니다. 즉, 부채의 63.8%(1,264.1조원)는 나랏빚과 관계없는 비확정부채이고, 이 비확정부채의 대부분(1,044.7조원)은 앞으로 70년간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입니다. 이를 재무제표상에 연금충당부채라고 표시한 것뿐입니다.



국가채무(D1)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	
중앙	확정채무 819.2조원(①+②+③) ①국채 815.2조원 ②차입금 3.3조원 ③국고채무부담행위 0.7조원	중앙	확정부채 717.6조원(①+②+③-④) ①국채 815.2조원 ②차입금 3.3조원 ③국고채무부담행위 0.7조원 ④발생주의 차이조정* 101.6조원
	지방	지방	비확정부채 1,264.1조원 연금총당부채(중앙+지방)** 1,044.7조원 기타 비확정부채 219.4조원

* 국민연금기금등에서 보유중인 국·공채 등 내부거래 제거로 인한 차이

** 연금총당부채에는 포함되지만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채에 포함된 연금부채마저도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대 계상

공무원·군인에게 장래에 줘야할 연금이면 빚 아닌가?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가회계기준(발생주의)은 장래에 공무원·군인들에게 줄 연금을 연금총당 부채란 이름으로 부채항목에 표시하지만, 장래에 들어올 연금보험료는 재무제표 어디에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총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니고, 발생주의라는 특정 회계기법상의 부채항목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에서 앞으로 30년간 들어갈 생활비가 10억원이라고 해서 “우리집 빚이 10억원”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30년간 돈을 벌어 생활비로 쓰기 때문입니다.

⇒ 연금총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니며, 다만 미래에 재정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관리합니다.

그래도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항목에 1,981.7조원 이라고 쓰여 있으니 불안한데?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에 대응되는 개념인 자산이 2,487.1조원입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505.4조원(=순자산)이나 많습니다.

자산

+	유동자산(현금·예금)	504.0
	투자자산(장기성예금·유가증권)	1,015.3
	일반유형자산(토지·건물·구축물)	604.1
	사회기반시설(도로·철도·항만·댐)	347.9
	무형자산	2.0
	기타비유동자산(장기미수채권 등)	13.8
		2,487.1조원

순자산





2021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anncho@kpfis.or.kr)

2021년 4월 말 기준

총수입 **217.7**조원
(누적 기준)

2021년 예산
483.0조원

진도율
45.1%
217.7조원

총지출 **234.0**조원
(누적 기준)

2021년 예산
572.9조원

진도율
40.8%
234.0조원

* 2021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16.3조원 적자
(누적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치

전월 대비

+13.8
조원

관리재정수지

40.4조원 적자
(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수치

전월 대비

+8.2
조원

국가채무

880.4조원
(누적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기준

전월 대비

+18.3
조원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1.6.),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총 수입

• 2021년 4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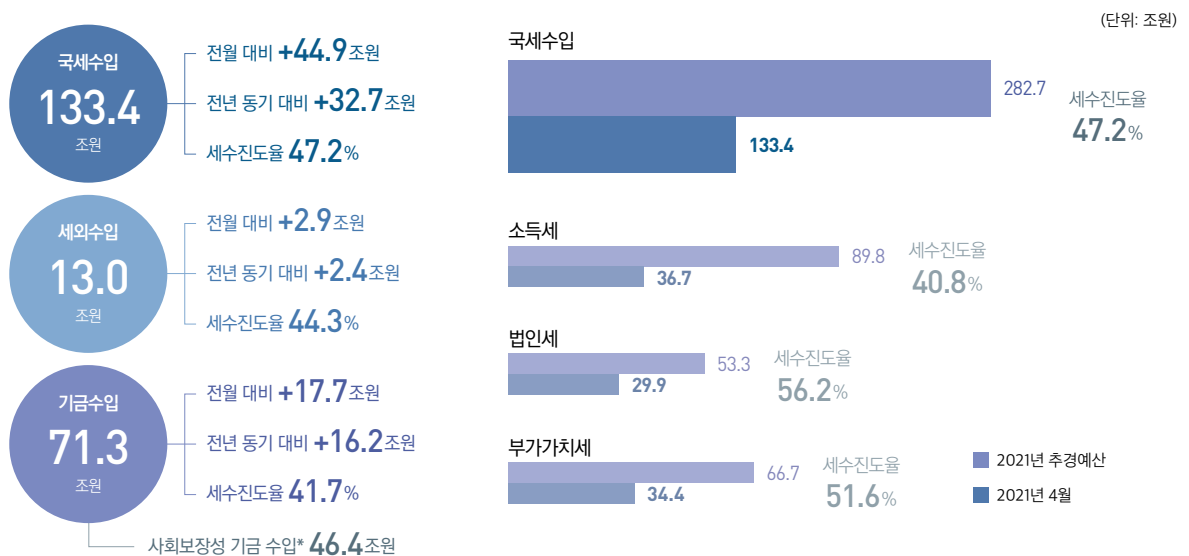
총수입
217.7
조원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1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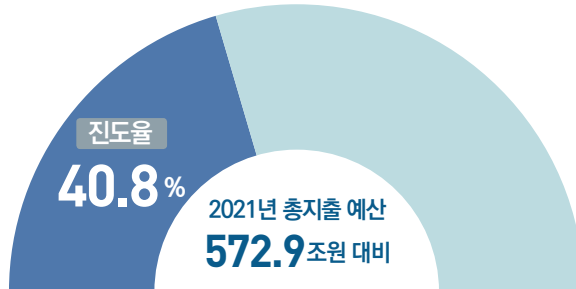


주: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총 지출

• 2021년 4월 말 기준

총지출
234.0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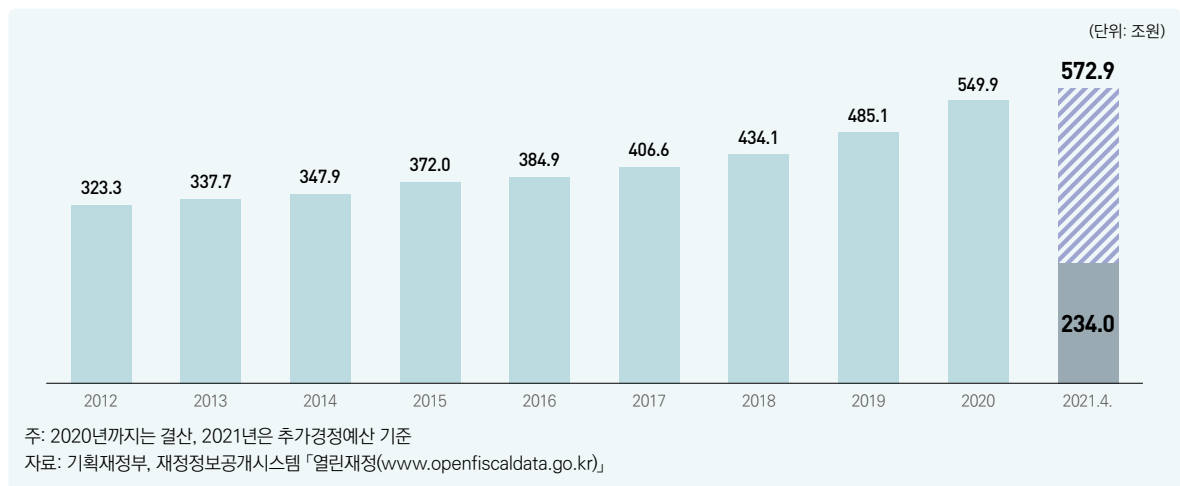
전월 대비
+51.8조원

전년 동기 대비
+24.3조원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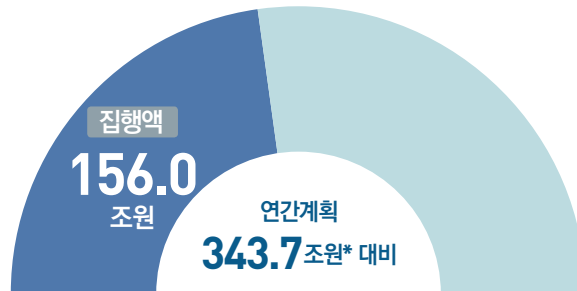
2) 2021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45.4%



전월 집행액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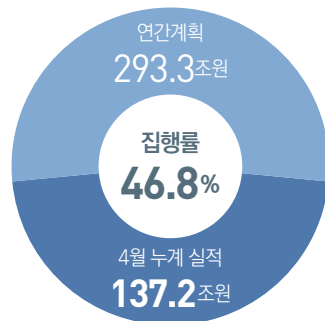
+33.4조원

전월 연간계획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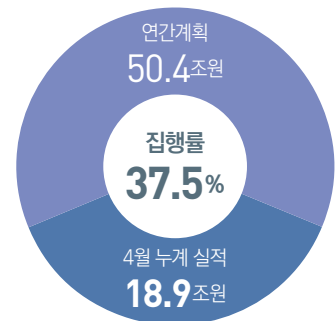
+9.7%p

* 2020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연간계획 수정(341.8조원→343.7조원)

중앙부처



공공기관



(단위: 조원, %)

집행률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부처명	4월 실적	집행률
①	중소벤처기업부	10.8	74.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	61.7
③	산업통상자원부	6.1	59.1
④	고용노동부	3.9	57.9
⑤	산림청	1.0	54.8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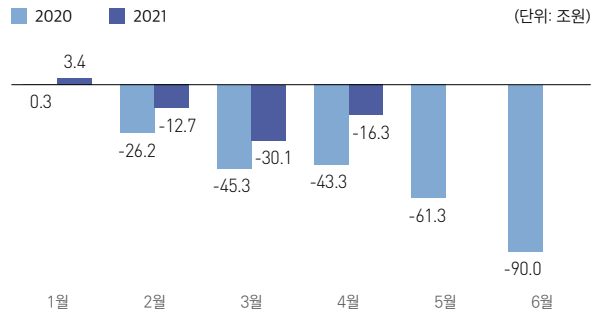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go.kr)」

재정수지

• 2021년 4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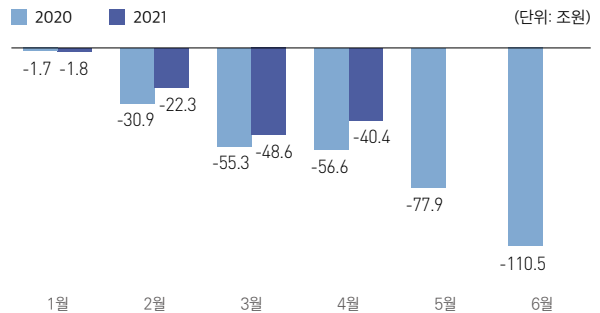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16.3조원
적자

전월 대비
+13.8조원
전년 동기 대비
+27.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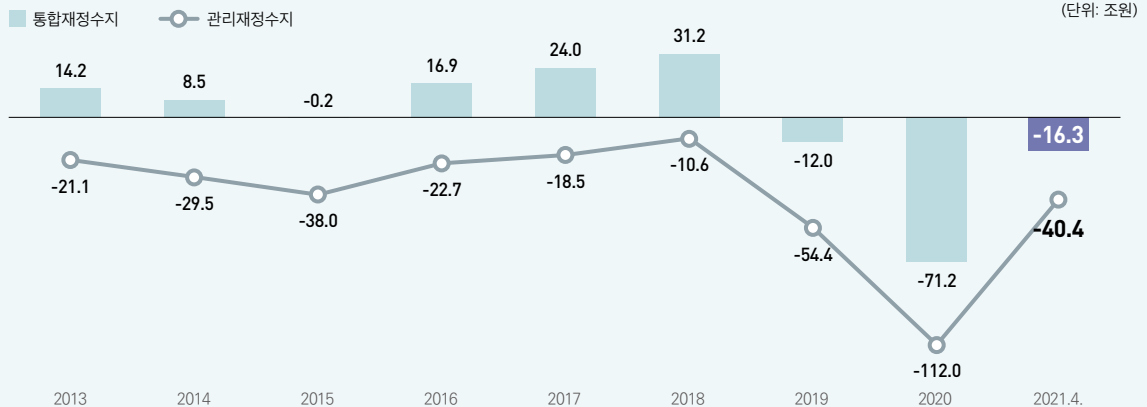
관리재정수지
40.4조원
적자

전월 대비
+8.2조원
전년 동기 대비
+16.1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4.1조원
흑자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0년까지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가채무

• 2021년 4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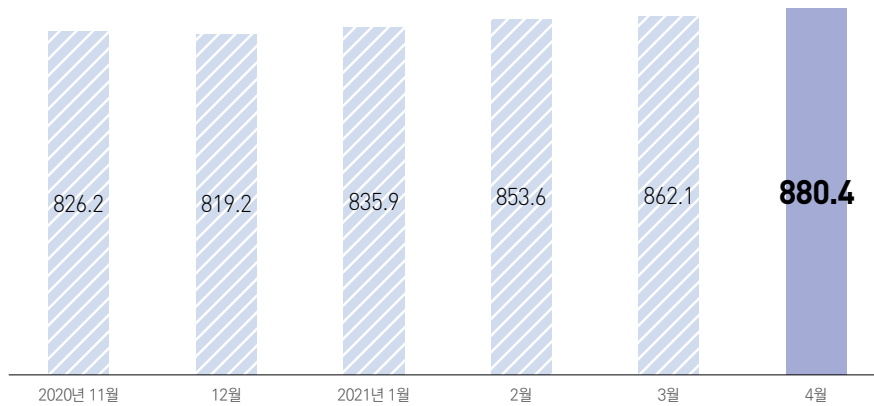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880.4
조원

전월 대비
+18.3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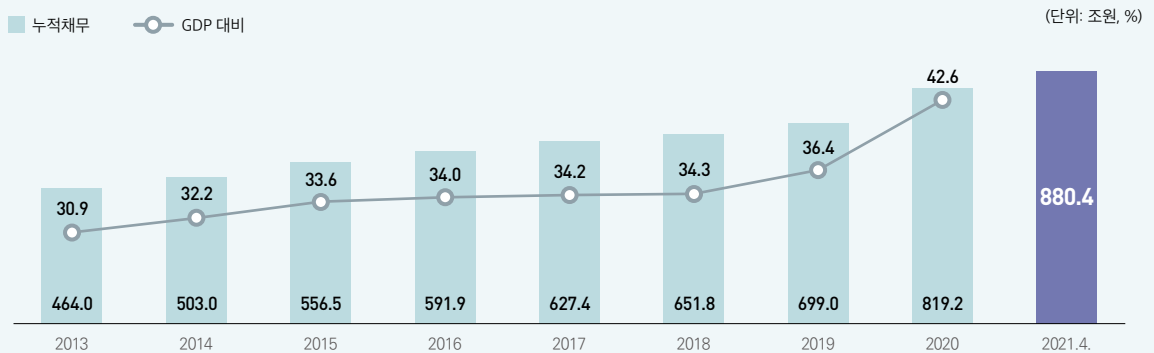
전년 대비
+61.2조원

2021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938.4조원**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국가재정통계 공식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결산

정부는 지난 4월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의 세입과 세출 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해 동안 심의·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이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그 해의 결산 결과가 다음 해의 예산 편성 과정에 환류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결산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인포그래픽·웹툰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회계결산 > 국가결산제도 개요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국가결산제도, 국가살림결산 2019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회계결산 > 국가결산제도 개요에서는 국가 결산제도에 대한 정의, 결산 보고서의 구성, 국회 심의 절차 등을 도표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국가결산제도, 국가살림결산 2019에서는 국가결산에 대해 웹툰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배움터
재정교실
재정웹툰

재정이란?
예산 및 기금
국유재산
연기금투자자
국고
부채
국채
조세
회계결산
주요재정제도

국가결산제도 개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국가결산제도 개요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집행한다. 집행 결과는 감사원 결산검사, 국회 결산심의 등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된다.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정부의 세입과 세출 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결산 결과는 감사원의 검사를 통해 집행의 적법성을 검증받으며, 예산 당국은 결산 결과를 포함한 집행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 요구를 하고, 정부나 해당 기관은 시정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작성한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집계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

국가결산보고서
 I. 결산개요
 - 국가결산보고서 개요
 - 경제여건
 - 예산편성 및 집행
 - 재정활동
 - 결산의 주요내용
 II.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 결산총괄
 - 세입세출결산
 - 수입지출결산
 III. 재무제표
 - 재무제표
 - 추계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IV. 성과보고서
 - 개요
 - 작성방법
 - 주요내용
 - 성과달성현황

<결산보고서의 구성>

청소년 재정배움터
재정교실
재정웹툰

송 2건

국가살림결산 2019

관리자, 2020-08-14

국가결산제도

관리자, 2017-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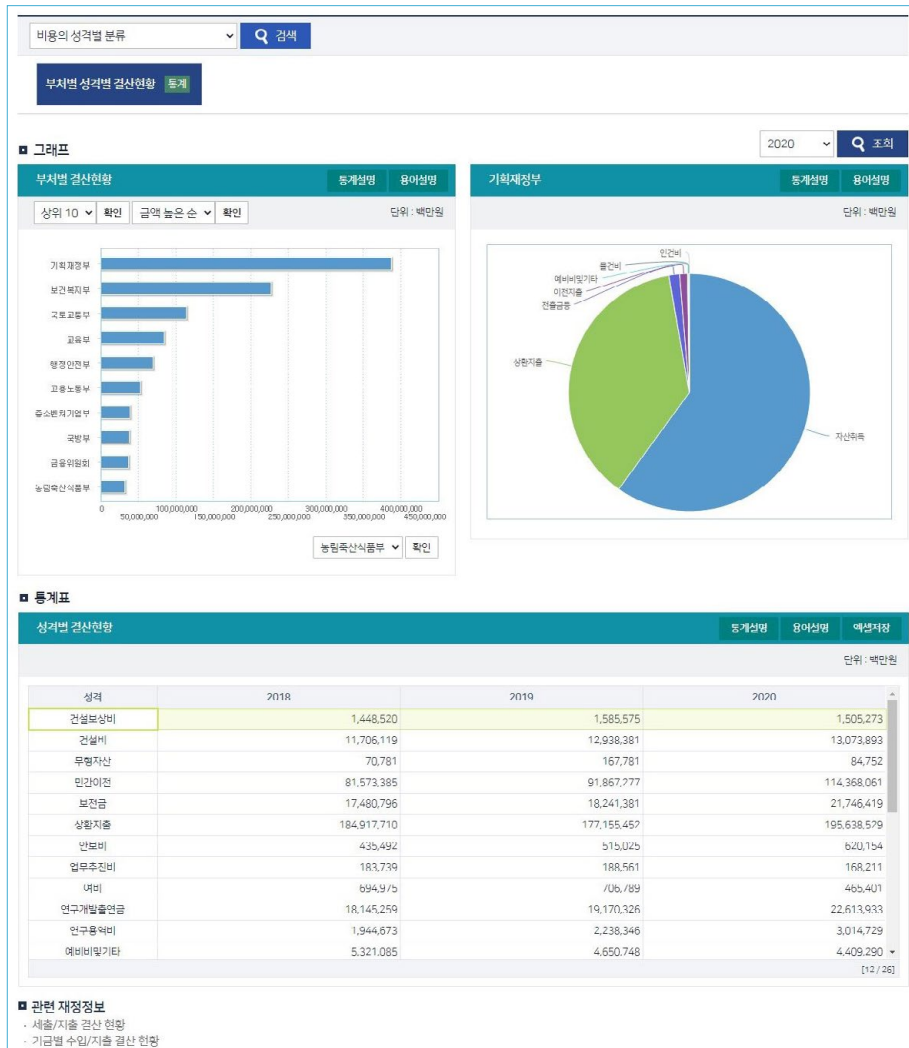


2 현황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부처별 성격별 결산현황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부처별 성격별 결산현황에서는 부처별 결산현황 그래프와 각 부처별 성격별 결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처별 결산현황에서는 결산 금액 높은 순 또는 낮은 순으로 부처명과 결산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화면에서 조회를 원하는 부처의 막대그래프를 클릭하면, 해당 부처의 성격별 결산 금액 비중과 규모가 파이차트로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화면 하단의 통계표에서 해당 부처의 최근 3개년의 성격별 결산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데이터·문서 자료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데이터자료 >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 32개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 > 문서자료 > 국가결산보고서 등 13개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결산에서는 결산 관련 각종 데이터 및 문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데이터자료에서는 결산과 관련된 각 회계연도의 소관별 또는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세계잉여금, 재정상태표 등 총 32개의 데이터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자료에서는 국가결산보고서,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 13건의 문서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DB

예산 · 결산 · 성과관리 · 국가채무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상세한 재정통계를 제공합니다.

전체목록
회계별 세입/세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메타정보보기

SHEET
OPEN API

회계연도 ▼
2020 ▼
조회

세부조건 열기

No	회계연도	회계구분명	회계명	계정명	(세입)예산현액(원)	(세입)수납액(원)	(세입)증감액(원)	(세출)예산현액(원)	(세출)지출액(원)
1	2020	기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손익계정	2,080,145,000,000	2,107,138,504,450	26,993,504,450	2,080,145,000,000	2,076,872,500
2	2020	기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자본계정	0	811,330	811,330	0	0
3	2020	기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손익계정	3,056,784,000,000	3,201,167,305,770	144,383,305,770	3,056,965,750,000	2,826,739,770
4	2020	기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자본계정	8,445,000,000	9,386,733,250	941,733,250	8,445,000,000	7,747,570
5	2020	기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손익계정	4,449,618,000,000	3,889,875,717,820	-559,742,282,180	4,452,604,254,640	3,852,662,250
6	2020	기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자본계정	188,484,000,000	205,372,520,920	16,888,520,920	204,219,047,330	169,598,840
7	2020	기업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299,510,000,000	320,682,046,170	21,172,046,170	300,150,402,500	290,298,040
8	2020	기업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자본계정	154,765,000,000	149,317,014,260	-5,447,985,740	156,290,522,970	148,409,960
9	2020	기업특별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자본계정	127,177,000,000	118,424,143,960	-8,752,856,040	127,692,272,210	107,405,700
10	2020	기업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513,591,000,000	476,186,521,220	-37,404,478,780	530,837,151,930	474,456,140
11	2020	기업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453,787,000,000	442,599,291,640	-11,187,708,360	485,856,452,720	442,387,750
12	2020	기업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9,439,774,000,000	9,540,467,478,610	100,693,478,610	9,534,046,000,320	9,439,354,960
13	2020	기업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3,970,094,000,000	3,942,937,800,740	-27,156,199,260	3,970,242,150,400	3,941,987,540
14	2020	기업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1,531,292,000,000	1,646,313,564,440	115,021,564,440	1,767,266,033,050	1,644,754,400
15	2020	기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	72,808,000,000	71,448,640,540	-1,359,359,460	72,808,000,000	62,248,150
16	2020	기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34,934,000,000	234,884,289,450	-49,710,550	266,575,850,000	234,760,850
17	2020	기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2,535,239,000,000	2,751,994,037,300	216,755,037,300	2,667,269,225,000	2,644,458,750
18	2020	기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6,591,358,000,000	6,489,507,713,830	-101,850,286,170	6,895,896,947,240	6,453,108,540

[19 / 60]

■ 관련 재정정보

-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세입/수입 결산 현황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자료		문서자료	
1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국가결산보고서
2	세입/수입 결산 현황	2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3	세출/지출 결산현황	3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
4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4	국가재무관리보고서
5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	5	채권현재액총계산서
6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	6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7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현황	7	물품관리운용보고서
8	세계잉여금	8	기금재무제표
9	재정상태표	9	정부기업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재무제표
10	재정운영표	10	결산개요
11	순자산변동표	11	기타 결산관련문서
12	소관별 재정상태표	12	재정증권 발행 계획
13	소관별 재정운영표	13	e나라재산 바로가기
14	소관별 순자산변동표		
15	회계·기금별 재정상태표		
16	회계·기금별 재정운영표		
17	회계·기금별 순자산변동표		
18	부담금 운용현황		
19	국가채권현황		
20	국가채권추이		
21	회계·기금별 국가채권현황		
22	채권현재액명세서		
23	정부출자현황		
24	정부출자기관 정부배당 현황		
25	연기금투자물 수탁규모(분기별)		
26	연기금투자물 기간수익률(분기별)		
27	연기금투자물 수탁규모		
28	연기금투자물 기간수익률		
29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		
30	국유재산현황		
31	국유지현황		
32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내역		



4

정부정책
정보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 '결산' 검색

결산과 관련한 재정당국의 주요 발표자료는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결산'으로 검색하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과 같은 총 90건의 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총 90건

검색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회계결산과	2021-04-06	15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복지예산과	2021-02-25	35
2020회계연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결산 고...		출자관리과	2020-12-10	11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 의결		회계결산과	2020-04-07	22
결산오류 철도공사, 채용비리 적발기관 2018년도 ...		평가분석과	2019-12-04	26
2019회계연도 살아가는 국가결산교육 실시		회계결산과	2019-11-11	30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회계결산과	2019-05-31	69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 의결		회계결산과	2019-04-02	20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		회계결산과	2018-11-12	16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회계결산과	2018-03-26	50



이달의 이슈키워드

소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소재’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 각국의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우리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벨트 전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소·부·장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연관 키워드로는 ‘장비’, ‘반도체’, ‘부품’ 등이 도출됐다. 이번 호 「나라재정」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소재 관련 재정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연관어

장비

반도체

부품

기업

생산

투자

용인

개발

하이닉스

공급

산업

제조

성장

구조

주지하다시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기술 및 제조기반 마련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올해 1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을 통과시켜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범정부 R&D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최근 ‘제조 2050’을 통해 반도체 내재화에 노력 중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공정 난이도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도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20%를 목표하고 있다. 특히, 10나노 이하 미세공정 기반의 반도체 기업에 투자금액의 20~4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경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이 그중 하나이다. △세제·금융 지원 △인력양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구성 및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재, 부품 등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여 한국형 팹리스 밸리(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K-반도체 전략 주요 내용

세부전략	주요 내용
공급망 안정화	• K-반도체 벨트 조성 -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 패키지 플랫폼, 첨단장비 연합기지, 팹리스² 밸리 구축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 인프라 지원 확대 -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약 510조원의 투자 계획
인력·시장·기술 확보	•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전문인력 확보, 연대·협력 생태계 강화, 반도체 신산업 기술역량 제고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 반도체 특별법 제정,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핵심기술 보호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1). “K-반도체 전략” 재구성

1. 「국방예산법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 Fabrication과 less의 합성어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소재 관련 2021년 재정사업

정부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을 목표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등 차세대 전략기술 추진확대 △글로벌 기술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확대 △기술이 생산까지 연계되는 지원기반 확충 등과 관련된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재 관련 예산

(단위: 억원)

관련 사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소재부품 기술 개발	2,687.7	2,617.0	3,009.9	6,027.5	8,866.3
소재부품 글로벌투자 연계기술 개발	-	-	8.2	42.5	97.4
소재부품산업 기술 개발 기반 구축	639.3	586.9	1,040.9	1,833.7	1,954.4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사업예산 시계열" 재구성

● 소재부품 기술 개발

정부는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술고도화를 통한 미래 소재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8,86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6,027억 원) 대비 47%나 늘렸다.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과제는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91개) △탄소 중립 등 소부장 친환경화(60개) △신재생에너지 소부장 국산화(24개) △방산 소부장 국산화(6개) 등이다.

글로벌 소부장 공급망 강화를 위한 91개 과제에는 반도체·디지털 패키징용 본딩³·몰딩⁴ 장비, 8.5세대 OLED용 회로 배선 장비 등의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전량 수입하는 반도체 패키징용 본딩·몰딩 장비의 국내 점유율을 70%(해외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8.5세대 OLED 회로 배선 장비 또한 전량 수입에서 국내 자급률을 30%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탄소 중립 등 소부장 친환경화 60개 과제에는 저전력 잉크소재, 바이오매스 기반 미래차용 친환경 타이어 개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저전력·친환경 잉크소재의 신시장을 창출해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량수입하고 있는 친환경 타이어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을 5% 점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재생에너지 소부장 국산화 24개 과제에는 수소충전기용 압축기 및 핵심부품 개발, 태양광 핵심 소재·부품 개발 등이 있다. 현재 국산화율이 42% 수준인 수소충전기용 핵심부품의 경우

2030년까지 국산화율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태양광 핵심 소재·부품 개발로 3,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 소재·부품의 국산화 과제와 관련된 6개 과제는 K-9 자주포 부품, 한국형 전투기용 레이더 반도체 등이다. 현재 국내 라이선스 생산으로 이뤄지는 K-9 자주포 엔진·엔진제어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약 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전량 수입 중인 한국형 전투기용 레이더 반도체도 국산화해, 1,100억원 수준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 소재부품 글로벌투자 연계기술 개발

소재부품 글로벌투자 연계기술 개발사업에는 전년 대비 54.9억원 증액한 97.4억원을 배정했다. 해외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 비용 절감, 개발시간 단축,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등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술확보 로드맵 구축, 글로벌개방형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한다.

기술확보 로드맵 구축사업에서는 수요기업 맞춤형 해외 핵심기술 발굴, 타겟기업 분석 및 전략수입 등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기 전 기술과 수요처를 확보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글로벌 개방형 기술 개발은, GOC⁵ 심사에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획득한 원천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 소재부품산업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소재부품산업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당 분야의 경쟁력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대비 120.7억원을 증액한 1,954.4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 기술기반 혁신과 첨단 분말소재부품 개발 기반 구축 등이 목표다.

소재부품 기반 혁신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제품설계 △시제품생산 △공정최적화 △성능평가 등의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첨단 분말소재부품 개발 기반 구축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금속분말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자동차, 금속소재부품, 차세대 등 다방면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금속분말의 제조부터 최종 제품의 신뢰성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을 지원한다. 육성된 기업을 통해 분말소재부품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수입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3 반도체 공정 중 하나로 웨이퍼 칩과 기판을 접착하는 공정.

4 반도체 마지막 공정으로 반도체 칩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물질로 감싸주는 공정.

5 Global Open-Innovation Company로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해외 기업인수, 상호 지분투자 등 경제적 공동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혁신활동에 성공한 기업을 의미한다.

OECD 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

OECD는 한국을 포함한 37개 회원국과 주요국의 향후 2년간 주요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한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를 연간 2회(5월, 11월) 발간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5월 31일에 발표된 경제전망보고서(No.109)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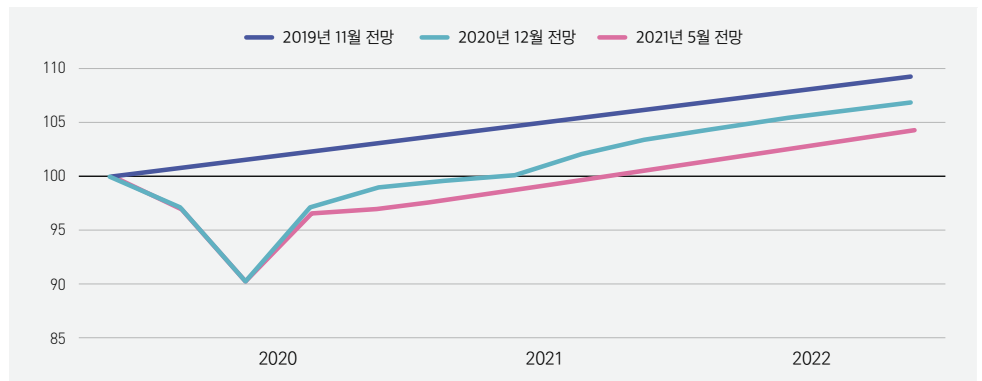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1. **최근 동향** 지속적인 경기 회복에도 팬데믹 이전 성장경로 하회

OECD는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년 세계 경제는 5.8% 성장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 전에 예상했던 성장경로로의 복귀는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림 1).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4%다.

〈그림 1〉 세계경제성장률



주: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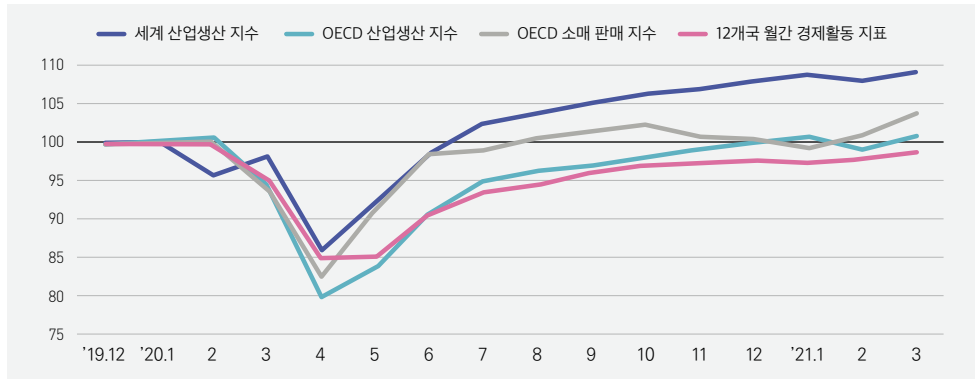
자료: OECD. (2021).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이렇듯,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각국의 정책노력과 백신보급 덕분이다. 각국 정부는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보건과 경제회복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검진, 백신 개발, 보급 등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신흥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 일자리, 경제 운용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했다. 그 결과, 산업생산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 상품무역은 IT 및 의료 장비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팬데믹 전 수준을 넘어섰다(그림 2). 소매 판매량은 몇 달 동안 변동이 없었으나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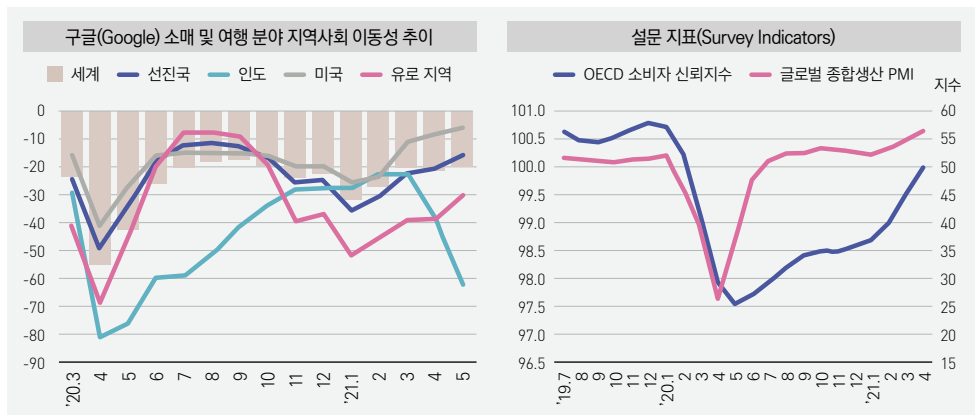
단, 보건 부분의 제약 때문에 많은 서비스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 국경을 넘는 서비스 무역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감소하였지만 경제활동 재개와 재정정책 지원으로 점차 증가 중이다. 글로벌 이동¹⁾은 2~3월에 증가했으나 4월에는 정체되어있다.(그림 3-왼쪽). 선진국, 특히 미국·이스라엘·영국 등과 같이 봉쇄조치가 완화되는 국가에서 이동이 두드러졌다. 반면, 유럽 일부와 라틴아메리카, 인도 등과 같이 바이러스 확산이 증가한 국가에서는 이동성이 줄었다. 기업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그림 3-오른쪽). 4월 글로벌 종합생산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2010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1. 구글(Google) 위치 기반의 지역사회 이동성 추이 변화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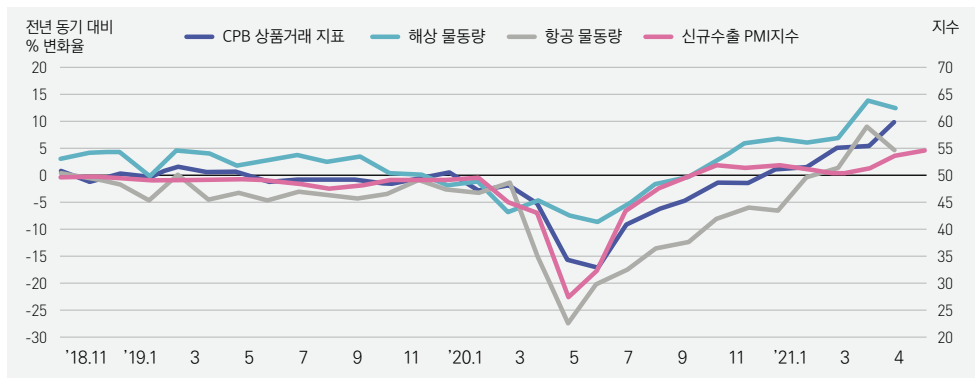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월간 경제활동 지표



〈그림 3〉 구글(Google) 소매 및 여행 분야 지역사회 이동성 추이¹⁾와 설문 지표(Survey Indicators)



〈그림 4〉 세계 상품거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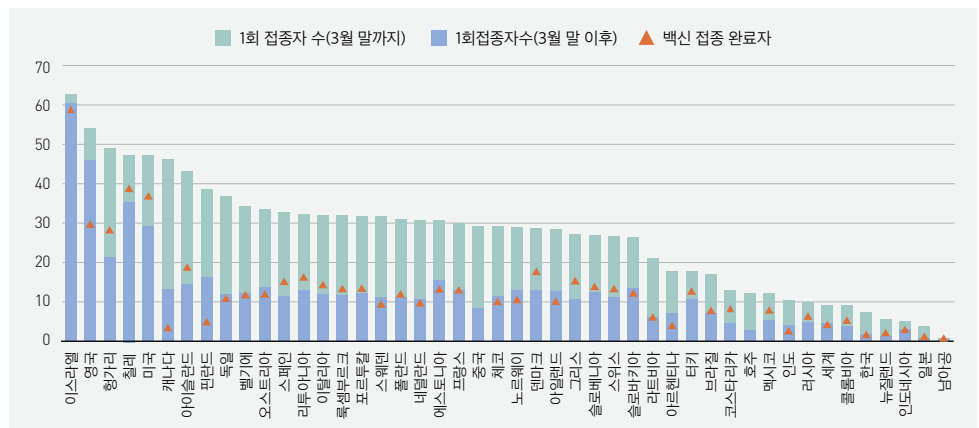
글로벌 상품거래 지표를 보면 개인 보호 장비, IT 상품 등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내구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글로벌 상품 무역지표는 반등하고 있다(그림 4). 특히, 아시아 지역의 무역 증가로 인해, 컨테이너 항구 교통과 총 상품 거래량은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반면, 서비스 무역, 특히 항공교통은 아직 회복이 더디다.

2. **전망** 국가, 지역별 균일하지 않은 회복

●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회복

백신보급은 나라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백신과 관련된 정책지원 규모와 전문성 규모도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그림5). 특히, 신흥국과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백신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는 선진국 대비 경제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 5〉 국가별 백신 접종



주: 100명당 백신 접종자 수(2021.5.17. 기준 또는 최근치)

자료: OECD. (2021),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1」

● 미국, 일본, 유로지역, 신흥국 전망

미국 경제성장률은 2021년 6.9%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3.5%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재정지원과 백신 보급의 가속화 덕분이다. 일본은 회복세가 둔화하여 2021년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감소했다. 대외수요 확대가 제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보건 대책이 여전히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중이다. 올해 성장률은 2.6%, 2022년은 2% 증가할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2021년 1분기에 성장세가 다소 부진하였는데, 이는 엄격한 봉쇄조치로 인해 민간 소비와 서비스 부문의 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단, 대외수요가 늘면서 제조 활동이 촉진되고 단기 근로계획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백신接种의 증가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이

며, 이 경우 2021년 4.3%, 2022년 4.4%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1년 8.5%, 2022년 5.8%로 탄탄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재정정책 긴축 전환 가능성, 기업 부채 증가 등의 리스크가 남아있다. 나머지 신흥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이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백신 접종의 지연, 정책 여력의 감소 등으로 선진국 대비 제한적인 회복이 전망된다.

●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증가

대부분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경우 석유, 원자재 등 소비재 가격이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해운 등 특정 분야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 인상의 조짐을 보인다. 물론 생산능력이 정상화 되고 소비패턴이 물품에서 서비스로 전환되면 다시 균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가격 인상과 상대적인 가격조정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시장이자율이 상승하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세계 무역 전망

2021년 세계 무역은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여전해 여행 관련 서비스는 제한받겠지만, 상품거래는 꾸준히 회복할 것이다. 세계무역량은 2021년 8.3% 가까이 증가하고, 2022년에도 6% 미만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경상수지는 약간 확대되겠지만 팬데믹 이전의 보통 수준에 그칠 것이다. 국가간 경상수지 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2022년 GDP의 4% 안팎에 이르고, 반면에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에 이를 전망이다.

3. **향후 상하방요인** 백신, 저축률, 신흥국 취약성 등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백신이 신속하게 배치되어 접종이 완료되면 세계 경제는 2021년 6.5%, 2022년 5.7~6% 상승할 것이다. 반면, 백신 생산과 배치속도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지 못하거나 변형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 2021년 5%, 2022년 3%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저축은,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를 분출시킬 것이다. OECD 국가 전체의 민간 소비는 2021년 약 5.5%, 2022년 약 4.5% 증가할 것이다. 이는 GDP를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

팬데믹의 위험성이 신흥국에서 아직 높은 편이다. 백신의 불안정한 보급, 느린 예방접종, 국가 봉쇄조치 등은 신흥국의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대부분 신흥국에서 이러한 부담은 1년 전보다 개선되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선진국의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유출, 부채증가로 인한 채무불이행, 파산 등 금융 리스크가 존재한다. 물론 선진국의 성장세 확대와 수요회복은 이런 리스크를 일부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정책권고 백신, 통화정책, 재정지원, 구조개혁 등에 집중

OECD는 백신의 신속한 보급, 완화적 통화정책, 피해계층에 집중된 재정지원, 자원 재분배 구조개혁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첫째, 백신보급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시험, 추적, 격리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자 수의 증가를 제한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여 유리한 금융조건(낮은 장기이자율 등)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셋째, 피해계층에 집중된 재정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 및 예방접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정책의 정상화는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고용지표 등을 보아가며 판단하되, 급격한 정책 축소는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탈탄소 및 디지털 부문의 투자,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향후 경제의 복원력·역동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즉 자원재분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5. 한국경제 평가와 전망 회복세가 강화되고 2021년 3.8% 성장

OECD는 한국경제에 대해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T와 자동차가 수출 호조를 이끌고 온라인 중심으로 민간소비도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대면 서비스업은 회복이 더디다는 것이다. 방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는 정체 중이지만 백신접종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봤다.

성장률은 올해 3.8%를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3월 전망치 3.3%와 비교해볼 때 2개월 만에 0.5%p를 올려잡은 것이다. 2022년에도 2.8% 성장하는 등 '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예상했다. OECD는 또 한국에 대해 △백신 접종 가속화 △확장 재정 지속 △한국판 뉴딜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등을 권고했다.





데이터 축적과 바우처

dBrain운영본부 기술지원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문법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본 코너는 데이터와 관련한 신기술, 정부정책, 데이터 댐, 산업동향 등을 전한다. 미국의 뉴딜 정책이 값싼 공공재(Electricity for All)로 만들어 공장·가정에 공급했듯이, 본 코너는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Data for All)'를 꿈꾼다. 이번 호는 데이터 축적 현황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에 대해 다뤄 본다.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데이터 경제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일컬어지는 굴뚝산업에서부터 스포츠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데이터가 실적을 달성하게 하는 중요 원재료이며 또한 금전적 가치로 이어지는 시대인 것이다.

이제는 데이터의 보유가 자원의 보유에 비견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다. 비약하여 말하자면 데이터 부국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국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나라가 <표 1>과 같이 데이터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표 1> 주요국의 데이터 경제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미국	데이터, AI 분야 선제적 전략투자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 보유
	(2016년) 빅데이터 R&D 전략, 국가 AI R&D 전략 발표
EU	AI 분야 대규모 투자 추진 및 개인 데이터 보호 강화 제도 정비
	(2017년)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 발표 (2018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데이터 접근권·이전권·삭제권 강화, 법적책임 명시 등) (~2020년) AI 산업육성에 민·관 합동 200억유로(26조원) 투자 방침
일본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주요 산업에서 AI 상용화 조기 추진
	(2017년) 미래 투자 전략 발표 (2019년) AI 종합 전략 완성
중국	데이터, AI 분야 대규모 선행투자 및 산업별 플랫폼 육성 박차
	(2017년) 빅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 차세대 AI 발전 계획 발표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2019년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2019~2020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020년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추진(데이터 댐 구축),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2020년 통합 데이터 지도 서비스 개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부터 데이터 축적을 거쳐 데이터 개방·공유·활용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데이터 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산업 전반에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활용을 촉진할 16개(2019년 10개 -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 2020년 6개 - 농식품, 해양수산,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라이프로그, 디지털 산업혁신)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100개 센터)이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2020년 말 기준으로 3,246종의 데이터를 축적했다. 데이터 라벨링이 완료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도 10대(자연어, 헬스케어, 자율주행, 농축수산, 국토환경, 안전, 미디어, 기타 분야, 지역특화(경제), 자유과제) 분야에 걸쳐 191종이 구축됐다.

구축된 데이터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구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중견기업,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에겐 데이터 구매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요기업은 지원사업의 공모를 통해 <표 2>와 같은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를 전문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에는 2020~2025년간 총 8,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표 2〉 데이터 바우처 종류

데이터 구매 바우처: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유료 데이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데이터 가공 바우처: 맞춤형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가공 비용 지원	수요기업의 이용 목적에 맞게 데이터 전처리, 태깅, 라벨링, 시각화, 분석 등을 맞춤형으로 가공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데이터 수집을 위한 체계가 구축됐고 데이터는 가시적으로 축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도 준비됐다. 이를 토대로 산업 전방위에서 데이터를 통한 소기의 성과 달성과 가치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2020). “데이터 경제”, URL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5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디지털 뉴딜, 빅데이터 플랫폼 통한 기업 맞춤형 데이터로 성과 창출”, 2월 9일, URL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911&searchOpt=ALL&searchTxt=>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데이터 댐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강국 도약…성과보고회”, 12월 16일, URL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1175>
- K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URL : https://www.kdata.or.kr/busi/busi_01_03.html

연금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인사혁신처는 연금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예상 지출액을 미리 계산해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로 환산한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박희준 사무관을 만나 공무원연금 총당부채에 대해 알아보자.

글·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Interview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박 희 준

사무관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채무와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Central Personnel Agency)으로 공직 인사혁신을 전담하기 위해 2014년 11월에 신설됐다. 인사혁신처의 연금복지과는 공무원연금제도 및 연금재정, 공무원연금공단 지도·지원 등 공무원연금 업무와 더불어 맞춤형 복지제도 등 전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의 박희준 사무관은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중장기 재정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공무원연금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공무 수행 중 사망·부상을 당하는 경우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국가는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지급합니다.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지급할 공무원연금 예상 지출액을 계산한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 총당부채입니다. 장래의 연금제도 운영에 있어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는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회계상의 부담액으로, 국채나 차입금과 같이 상환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나랏빚인 국가채무(Debt)와 다른 ‘미확정 부채’다.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는 70년 이상의 초장기 기간에 대한 예측치이기 때문에 재무적 가정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다. 특히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바꾸어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규모는 수백조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는 변동성이 매우 큰 비확정 수치이므로 부채 규모 국제 비교 시에는 산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IMF 국제 기준에 따른 부채 구분 중 어디에도 공무

원연금 총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OECD 주요 국가에서도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는 단지 참고용 자료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OECD 37개국 중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를 산정하여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을 포함한 13개국뿐입니다.”

구분	국가 채무(Debt)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개념	갚아야 될 빚	지급해야 될 지출액
특성	확정적 (원금, 이자율이 정해져 있음)	미확정적 (할인율 등 가정에 따라 변동성이 큼)
부담 주체	국가(국민)	공무원 등(보험료) * 보험료 등으로 총당되지 않는 경우, 일부 예산으로 지급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증가의 원인

매년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규모가 변동하는 가운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70조원이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증가의 원인은 국채금리와 연동되어 매년 바뀌는 할인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산정 시 약 70년 이상의 추정치를 적용하므로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번에 산정한 2020회계연도의 경우, 전년 대비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증가분(71.4조원) 중 단순 할인율 변경에 의한 증가분이 약 78%(55.8조원)입니다. 할인율 감소가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증가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이러한 요인에 따라 공무원연금 총당부채가 지속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연금 총당부채가 증가하면 국가재정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박희준 사무관은 공무원연금 총당부채가 연금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예상 지출액만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지출액은 재직 공무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 등의 연금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 총당부채가 국가의 빚이 되어 세금으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인식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무원연금 총당부채가 재정건전성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건전성은 지출액에 상응하는 수입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는 수입에 대한 고려 없이 지출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여 연금 수입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를 포함한 국가 결산의 문제점

1.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산정범위에 따른

과대 계상 문제

우리나라는 국가 결산 시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를 포함하여 부채를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산정범위에 따른 과대 계상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공무원연금 총당부채에는 지방 공무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의 회계가 구분되어 있으

로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추정액이 국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¹.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는 근로에 따른 대가를 미래 연금으로 지급할 의무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받은 고용주에게 연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의 연금추정지급액은 지방정부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발생주의를 채택하여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를 계산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교육청 소속 포함)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를 별도로 분리·공시하고 국가 총당부채에는 지방 공무원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지방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대 계상된 측면이 있고, 국제적 국가신인도 평가 시 왜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만약, 지방공무원을 제외하면 2020년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규모는 829조원에서 289조원으로, 현 산정 규모의 35%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9회계연도부터는 국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금액 중 지방직에 대한 총당부채 규모를 추가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2. 낮은 할인을 적용으로 인한 과대 계상 문제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산정 시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할인율보다 낮은 국채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산정 시 10년 치 국채이자율 평균(평균 2.7%)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다. 국채는 무위험

1 조세재정연구원. (2020.12.). “OECD 국가별 연금총당부채 해외사례 조사”, pp. 70-77.

자산으로 통상 회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취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파산에 대비해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미리 계산해본 것이다. 국가는 민간 기업에 비해서 파산의 위험성이 낮는데, 낮은 이자율의 국채할인율을 사용하다 보니 오히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크게 계산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일반 회사보다 국가가 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파산에 대비해 훨씬 더 많이 대비해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재정평가의 역설(Valuation Paradox)’이라 한다².

“영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산정 시 민간 기업에서 발행한 우량회사채 할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국 방식으로 우량회사채 할인율(평균 3.5%)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713조원으로 100조원 이상 감소합니다.”

3.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산정 문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연금 수입을 기금으로 쌓아두고 이를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적립방식이 아니라, 현 재직자가 낸 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퇴직자에게 바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부과방식의 연금 제도에서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산정 실익이 크지 않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파산에 대비하여 충당부채에 상응하는 적립자산을 보

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국가는 계속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파산을 가정한 연금 자산 적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의 공적연금과는 잘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³.”

연금제도 유형

적립방식 (Funded System)	부과방식 (Pay-As-You-Go System)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 가입 기간의 평균화된 표준보험료 등 수입으로 미리 적립하도록 계획된 방식	당해 연도 필요 급여 재원을 그 해의 연금가입자를 통해 조달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그 금액이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인 재정방식

EU에서는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우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변동성이 크고 불확정적이므로 결산서 본문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⁴, 프랑스도 부과방식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에 표기하지 않고 있다⁵. 우리나라도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따라 연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채무와 부채의 차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개념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연금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² 성주호. (2016). “최신 연금수리학”, 법문사, p.93.

³ 성주호. (2020). “연금계리 관점에서 살펴본 연금충당부채 정부공시의 적합성”, 금융감독연구, 7(1), p.107.

⁴ EUROSTAT. (2013). “European system of accounts - ESA 2010”, Paragraph 5.184.

⁵ 조세재정연구원. (2020.12).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 조사”, p.42.

경제개발계획의 집행: 재정투융자와 경제기획원

글.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dsoak@naver.com)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1962년을 기점으로 1986년까지 다섯 차례 집행됐다. 장기집권과 연속성에 기초했던 경제개발계획은 1987년에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채택되며 사실상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2월에 취임하자마자 기존 6차 계획(1987~1991년)의 수정계획을 작성했고, 1993년 2월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기존 7차 계획(1992~1996년)을 폐기하고 자신의 임기에 맞춘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년)을 수립했다. 이후 경제개발계획은 더 이상 수립되지 않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지만, 2004년부터 수립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이를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변천의 과정을 감안할 때 경제개발계획이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간은 약 20년에 달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모두 4차례의 계획 기간(1962~1981년)에서 계획의 성격은 점진적으로 변화했지만,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은 내외자(内外資)를 동원하여 자본축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있었다. 당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했던 경제기획원은 경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며 강력한 조정기능을 발휘하고 국력을 결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자본축적과 재정투융자

정부의 직접통제를 배격하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자본축적을 위해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수단은 재정정책이다. 경제개발에서 중추적 집권기능을 행사한 경제기획원은 당시 서구 선진국에서 유행했던 ‘소비가 미덕’이라는 케인시안 재정이론이 후진

¹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예산당국은 비공식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으나 2004년에 이르러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공식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고정자본 형성을 위한 재정투융자를 적극 추진했다.

“후진국에 있어서 경제개발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축적의 증대이다.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 공산주의는 저임금, 격심한 소득의 불공평 또는 소비재 생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 생활을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높은 저축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느 방법도 오늘날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후진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 후진국에 있어서의 재정정책의 특색은 … 첫째 정책의 기본목표가 경제의 성장에 있으며, 둘째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자본축적과 투자증대가 급선무이며, 셋째 정부의 경제통제는 직접통제보다는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한 간접통제와 유도의 방법이 되어야 하며, 넷째 왜곡된 기존 투자패턴을 적정 투자패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²

재정투융자란 ‘자본적 기능의 재정지출’로서 정의될 수 있는데, 여기서 자본적 기능이란 정부 부문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와 소비적 물건비(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정부의 실물 및 금융자산의 증대를 가져오는 지출로써, 실물자본 형성을 위해 지출되는 고정자본적 지출과 공기업·민간기업에 대한 출자 또는 대부 형태의 금융적 지출(출자와 융자)을 모두 포함한다.

고정자본적 지출에는 도로·항만·공항 등의 수송시설, 공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 주택·상하수도·병원 등 후생복지시설, 교육시설, 국토보존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정부출자는 석탄, 주택, 비료, 제철, 석유화학 등 공기업(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업 등)에 대한 각종 출자를, 그리고 재정융자는 기간산업 육성, 산업구조 개선, 수출산업 진흥, 중소기업 육성, 주택건설 촉진 등을 위해 민간기업의 자금 부족을 보완하는 융자지출을 각각 의미한다.³

특히 재정융자는 1961년 예산회계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기금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달리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와 공공부문에 의해 설치 운용될 수 있는 자금이었다. 1980년 말까지 기금은 모두 38개 설치됐는데 상당수의 기금은 융자를 목적으로 했다. 그 설치목적에 따라 기금은 융자성, 사업관리성, 적립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1980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의 용도별 비중은 각각 62.0%, 23.9%, 14.1% 등과 같았다.⁴ 그리고 기금에 의한 융자는 전체 재정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² 경제기획원. (1964). “재정투융자 해설”, p.2.

³ 재무부는 1990년대까지 「재정투융자백서」를 발간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재정통계에 대한 개념적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재정투융자 개념이 혼란스럽게 규정되고 있었다.

⁴ 최광. (1991). “한국재정 40년사(제7권): 재정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p.412.

었다⁵. 재정투융자 규모는 1964년의 긴축재정,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국민총생산 대비 평균 7%대를 유지했다. 재정 규모 대비 비중은 제2차 계획 기간에(1967~1971년) 29.3%를 기록했으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채택되면서 제3차 계획 기간(1972~1976년) 33.6%, 제4차 계획 기간(1977~1981년) 38.1%로 크게 증가했다. 민간투자와 민간금융의 역할이 극히 미미했던 시기에 정부가 재정투융자를 별도로 계리(計理)한 것은 전략적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표 1〉 재정투융자의 규모와 비중¹⁾

(단위: 억원(경상가격), %)

연도	GDP 실질성장률	국민총생산 (GNP)	재정 규모 ²⁾		재정투융자		
				對 GNP		對 GNP	對 재정 규모
1962	3.9	3,555	1,199	33.7	272	7.6	22.6
1963	9.0	5,029	1,110	22.1	273	5.4	24.6
1964	9.5	7,163	1,208	16.9	237	3.3	19.6
1965	7.3	8,057	1,541	19.1	295	3.7	19.1
1966	12.0	10,370	2,310	22.3	626	6.0	27.1
1967	9.1	12,812	2,912	22.7	790	6.2	27.1
1968	13.2	16,529	4,029	24.4	1,176	7.1	29.2
1969	14.6	21,553	5,780	26.8	1,756	8.1	30.4
1970	10.1	27,769	5,990	21.6	1,843	6.6	30.8
1971	10.5	34,069	7,358	21.6	2,133	6.3	29.0
1972	7.2	41,775	9,664	23.1	3,098	7.4	32.1
1973	14.9	53,555	9,602	17.9	2,736	5.1	28.5
1974	9.5	75,645	14,283	18.9	4,763	6.3	33.3
1975	7.8	100,646	21,236	21.1	8,058	8.0	37.9
1976	13.2	138,182	28,952	21.0	10,409	7.5	36.0
1977	12.3	177,286	37,178	21.0	12,596	7.1	33.9
1978	11.0	239,368	47,553	19.9	16,798	7.0	35.3
1979	8.7	307,411	64,665	21.0	27,798	9.0	43.0
1980	-1.6	367,497	86,478	23.5	31,158	8.5	36.0
1981	7.2	455,281	106,849	23.5	45,603	10.0	42.7

주 1) GDP 실질성장률은 2021년 현재 한국은행의 수치이며 그 외는 1993년 당시의 수치

2) '일반재정' 규모가 아니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망라하는 금액으로 추정
자료: 재무부, (1993). "재정투융자백서", p.31 참조

⁵ 재무부, (1982). "재정투융자백서", p.14.

경제개발계획의 성격: 사업관리에서 역량결집으로

1960년대 초기 경제개발계획이 처음 논의될 때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지배적 인식은 해롯-도마(Harrod-Domar)의 경제성장이론에 따라 자본만 투입하면 경제개발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투자사업들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집행할 것인가에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독려하면서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이 곧 경제개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거시지표 중심의 추상적 관념에 머물렀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인식이 1962년을 분기점으로 완전히 변화했던 것이다.⁶ 여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계획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동향보고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월에 한 번씩 하면서 장관들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왜 안됐느냐’ 따지는 겁니다. ... 이 양반이 굉장히 정열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들한테 일선 사단장이 중대장한테 하듯이 ‘왜 300고지 올라가라는데 290고지밖에 못 올라갔어’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장관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지 어찌겠습니까? 자기도 돌아가면 밑에 있는 과장들한테 그럴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터지고 내려가면 저 밑에까지, 면서기까지도 터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집행이 돼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경제개발정책이 있으면 뭐 합니까? 서가에 꽂아 놓으면 그게 계획입니까?”⁷

투자사업계획 중심으로 명령계획(Imperative Plan)의 성격을 띠었던 경제개발계획은 제3차 계획부터 유도계획(Indicative Plan)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다.⁸ 계획의 수리적 목표를 중시하던 명령계획과 달리 유도계획에서는 국민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의제들을 발굴하고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소득계정의 총량계획과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됐던 경제개발계획은 그 수립과정에서 관료, 학자,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수단이 됐다. 이 과정을 통해 경제기획원은 정책조정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관료들의 역량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⁹

6 강광하·이영훈·최상오. (2008).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부록 1〉, “경제관료인터뷰 발췌문-황병태 전차관보”, pp.333-334.

7 강광하·이영훈·최상오. (2008). 앞의 책, 〈부록 1〉, “경제관료 인터뷰 발췌문-이경식 전부총리”, pp.292-293.

8 강광하·이영훈·최상오. (2008). 앞의 책, p.83, pp.86-87.

9 경제기획원의 리더십은 대통령이 매월 주재하는 경제동향보고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김흥기 편. (1999). “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육의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사, p.148.



자료: 수출진흥확대회의, (1972.4.24.)

그리고 1965년 2월부터 도입한 월간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우리나라가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사실을 전국민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1963년부터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1964년에 수출 1억 달러가 달성됐다. 이때 정부는 수출이 성장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며 수출제일주의를 국가의 지상목표로 삼았다¹⁰. 민간기업 대표들도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대통령이 매월 주재하면서 연초의 수출목표액에 대한 월별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전국민들에게 확산시켰다. 이러한 수출진흥확대회의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까지 거의 매월 지속됐다.

개발재정의 공과: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그리고 외채누적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는 높은 실질 경제성장률로 표현됐다. 제1차 계획 기간(1962~1966년)에는 8.3%, 제2차 계획 기간(1967~1971년)에는 11.5%, 제3차 계획 기간(1972~1976년)에는 10.5%를 각각 달성했다. 특히 1963년부터 1979년까지 17년간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어나갔다. 이에 따라 1인당 GDP는 1960년에 전 세계 하위 10% 국가에 속했지만 1979년에는 중진국 수준으로 도약했고, GDP 총액은 1960년 전 세계 37위 수준에서 1979년 23위 수준으로 상승했다. 찢어진 가난의 굴레를 벗

¹⁰ 1964년 상공부 공업국장이었던 오원철은 당시를 ‘우리나라의 대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회고했다(오원철, (1995). “한국형 경제정책”, p.219.). 이후 오원철은 청와대 경제2수석비서관, 중화학공업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어나 비로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수반했다. 1966~1972년 기간 중 8.9% 상승했던 도매물가는 1973~1977년 기간에 19.3% 증가했다¹¹. 재정투융자를 통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했고, 이의 상당 부분은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보전되면서 통화증발의 요인이 됐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의적인 ‘일반재정’ 개념에 기초하던 정부의 재정통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¹². IMF의 재정통계지침에 따라 재정통계가 전면 정비된 1979년 이후야 비로소 객관적인 통계수치로 확인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경제개발의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인플레이션, 재정적자보다는 외채누적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전략은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 국제적인 고금리, 선진국의 신흥공업국에 대한 규제 강화, 치열한 수출 경쟁 등으로 외채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1979년 말 한국의 장기외채 잔액은 156억 달러에 달하여 브라질 506억 달러, 멕시코 345억 달러의 뒤를 이으면서 1981년에는 세계 5대 채무국에 포함됐다¹³. 이 수치는 대만 39억 달러, 필리핀 77억 달러, 태국 26억 달러에 비할 때 아시아의 개도국 중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것이었다¹⁴. 외채의 심각한 누적은 1980년대 초반 외채망국론으로 이어지며 지난 20년간의 경제개발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懷疑)가 제기되기도 했다.

경제기획원은 1978년부터 이 모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¹⁵. 재정투융자와 함께 이루어진 국내 산업에 대한 각종 보호·지원 및 규제 등 과도한 정부개입이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을 이루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79년 4월 신현확 경제기획원 부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하여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그간 터부(Taboo)시됐던 수출지원 축소, 중화학투자 조정과 함께 재정의 안정, 금융의 긴축, 투자의 조정, 경쟁의 촉진, 수입의 촉진, 가격의 현실화, 금융의 자율화 등이 포함됐다. 당시 경제관료들은 이를 지난 20년간의 정책기조인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표현했는데¹⁶ 그해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한국은 다시 정치적 격변기로 접어들었다. (다음 호에 계속)

11 경제기획원 편. (1982).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30년사(1961~1980)”, p.186.

12 재무부의 「결산개요」와 경제기획원의 「예산개요」에서는 재정수지 지표가 전혀 생산되지 않았다.

13 동아일보. (1982). “브라질 외채 870억 달러 한국은 5위 350달러”, 9월 18일.

14 유면식·송면. (1982). “ASEAN NICs의 외채와 그 상황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p.13.

15 경제기획원 편. (1982).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30년사(1961~1980)”, pp.193~245.

16 김흥기 편. (1999). 앞의 책, p.275.



Johannes Jan Vermeer, <The Music Lesson>, 1662-1665,
Oil on Canvas, 73.3×64.5cm, Royal Collection, London

페르메이르의 〈음악 수업〉과 중산층의 삶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서양 미술가 중에서 빛을 가장 잘 이해한 화가를 꼽으라면 누구도 요하네스 페르메이르(Johannes Jan Vermeer, 1632~1675년)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로 주로 실내의 풍경에 집착했다. 그의 작품은 35점가량 되는데 그중 28점이 유리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실내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특히 그는 세밀한 붓끝으로 실내에 들어오는 빛 속에 신비롭고 부드럽게 드러나는 인물의 표정을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의 작품 중에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Girl with a Pearl Earring)〉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삶과 작품세계를 새롭게 보여줬다. 이 영화는 주인공 소녀가 어떻게 푸른 두건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진주 귀고리를 하게 됐는지에 관한 우리의 궁금증도 풀어준다. 또한 우중충한 도시의 배경화면과는 달리 페르메이르의 작업실을 화면에 담을 때는 빛의 화가의 작업실답게 아주 밝은 색감을 구사하고 있다. 페르메이르가 빛과 명암에 관해서 그렇게 섬세한 집착을 보인 것은 바로 다른 아닌 렘브란트(Rembrandt) 화풍에 크게 영향받았기 때문이다.

왜 그의 그림에는 늘 창문이 등장하는 것일까? 당시의 유리창은 글라스 블로잉(Glass Blowing)의 기법으로 만들어졌고 창은 납으로 된 틀로 작게 나누어져 있었다. 거기에 유리 조각을 끼웠다. 유리 가공기술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창 표면은 구불구불해서 유리창을 통해서 본다면 시각적인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창밖의 풍경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어둠을 걷어가며 실내를 따듯하고 밝게 바꾸어버렸

다. 네덜란드는 일 년 중에 화창한 날이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맑은 날에 실내로 들어오는 햇빛은 그들에게 축복과 같았다. 그만큼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창문은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페르메이르에게 유리창은 실내의 진풍경이 드러나도록 빛을 들어오게 만드는 매개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그림을 보는 많은 이들은 적막한 침묵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화면 안에서 시간이 정지된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속에 오히려 시간과 공간이 마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환각마저 들 정도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대개 자신들이 하는 일만을 묵묵히 하고 있다. 오히려 그림 앞에 있는 관람자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일상을 몰래 훑쳐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의 그림 중에 <음악 수업(The Music Lesson)>을 보면 이와 같은 페르메이르의 그림 특징들이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악기 앞에 앉아 있는 여인의 뒷모습은 그리 편치 않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녀의 속마음을 우리는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 모습에서 읽어낼 수 있다. 더욱이 그 오른쪽에 왼손에 막대기를 쥐고 서 있는 음악 교사의 엄격한 모습에서 이 음악 수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앞과 뒤에 배치된 가구와 첼로로 보이는 악기가 은연중에 원근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 여인의 뒤에서 들어오는 빛은 그녀의 옷의 섬세한 질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세 때부터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제노아, 밀라노 등의 항구 도시들이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북유럽지역에서는 플랑드르 지방과 북부독일 지방이 상업과 교역의



Johannes Jan Vermeer, <View of Delft>, 1662-1665, Oil on Canvas, 96.5×115.7cm, Mauritshuis, The Hague

페르메이르의 그림 <음악 수업(The Music Lesson)>은
 당시 부를 축적한 중산계층의 여성들에게 교양 교육의 하나로서
 음악 교습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급됐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중심지로 부상했다.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대륙의 발견과 동인도항로의 개척에 의해서 세계 시장은 급속하게 확대됐고, 이와 함께 신시장의 생산물과 자원·식민지 획득을 둘러싸고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 간에 격심한 상업전쟁이 전개됐다. 특히 16세기 중반 무렵 볼리비아와 멕시코에서 금광과 은광이 발견되어 이것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유럽의 금, 은 보유량은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아래 중상주의(Mercantilism)라는 경제사상이 싹트게 됐다.

중상주의적 체제는 이전의 봉건체제(혹은 장원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된 것으로, 절대주의적인 국왕에게 국가의 국내적 통일과 부국강병이 절실히 요구됐으므로 관료와 상비군을 확대했고 이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해야만 했다. 중상주의하에서의 절대주의 국가의 경제적 목표는 국부의 증진에 있었다. 국부의 증진은 곧 화폐(=금은)의 축적을 의미하며, 화폐는 교환 즉 상업을 통해서 획득된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의 재상이었던 장바티스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는 말하기를 “국가의 위대함은 그 나라의 화폐의 풍부함에 있다”고 할 정도였다.

중상주의 무역론은 중상주의 화폐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외국 무역은 화폐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외국 무역이 국부를 얻는 첩경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대외무역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초기에는 자국의 화폐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입을 극도로 억제하는 중금주의(Bullionism)를 채택했다. 중상주의 시대가 끝나는 것은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에 따라 중상주의적 체계가 제조업 중심의 공업적 체계로 바뀌면서 중상주의적 경제정책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18세기 중엽이다.

페르메이르의 그림 <음악 수업(The Music Lesson)>이나 <기타를 치는 젊은 여인(Woman Playing a Guitar)>과 같은 그림들은 당시 부를 축적한 중산계층의 여성들에게 교양 교육의 하나로서 음악 교습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급됐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지방은 무역을 통해서 획득된 부로 말미암아 신흥 상인계층이 급속히 늘어나게 됐다. 이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은 빠르게 향상됐고, 이들은 새로운 경제적 중산계급을 형성했다. 그 이전에는 예술에 대한 수요계층이 주로 왕족이나 귀족 계급에 국한됐으나, 점차 신흥 부르주아 계층에서도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 계층의 소비수준이 증가하게 되면서 문화와 교육에 대한 지출 역시 늘어났고, 가정에서도 여인들의 교양을 증진하는 소양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던 것이다.

집단행동론의 개척자,

맨슈어 올슨

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자유주의연구회 회장

Mancur Olson

맨슈어 올슨 1932~1998



집단행동 논리의 핵심

집단행동 연구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공로로 유력한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보에 올랐지만 끝내 수상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미국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1932~1998년). 노르웨이 출신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집단행동 논리 연구로 경제학계에 입문했다.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고, 변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면 이익집단의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듯하다.

집단행동 논리의 핵심은 이렇다. 경쟁 없이 손쉽게 돈벌이를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심리다. 공급자들이 담합을 통해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가격을 올려 소비자를 희생시켜서 이익을 챙긴다. 이익집단은 로비를 통해 정부를 압박, 각종 특권을 얻어낸다. 특권이란 경쟁으로부터 집단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면허제, 인허가제, 관세, 비관세 등의 시장규제다.

작은 그룹은 뭉치기가 쉽고 이해상관도 높아 그룹 이기심을 관철하기도 쉽다. 그러나 소비자, 납세자, 노인 등의 그룹은 규모가 너무 커 뭉치기 어렵고 그래서 조직된 이익집단에 의해 착취당한다는 게 올슨의 설명이다. 이익집단은 재화를 생산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미약한 그룹들을 희생시켜 이익을 챙기는 ‘분배동맹’이라는 그의 개탄도 주목할 만하다.

올슨은 이런 논리로 지대추구 사회의 등장을 설

집단행동 논리의 핵심은 이렇다.

경쟁 없이 손쉽게 돈벌이를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심리다.

공급자들이 담합을 통해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가격을 올려 소비자를

희생시켜서 이익을 챙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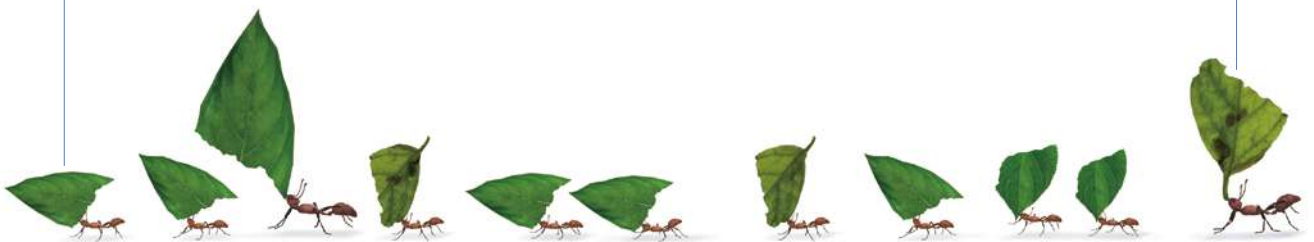
이익집단은 로비를 통해

정부를 압박, 각종 특권을 얻어낸다.

명한다. 지대추구란 생산적인 경쟁 대신 국가의 보호를 받아 힘들이지 않고 돈벌이하는 행동이다. 주목할 것은 집단행동의 논리가 경제변영에 미치는 영향이다. 분배 동맹의 목적은 구성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혁신능력과 생산성 하락은 필연적이다. 분배 동맹이 득세하는 경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능력이 둔화하고 그 결과는 경제의 ‘동맥경화’라는 것이 올슨의 설명이다.

올슨은 그룹 이기심으로 무장된 이익집단은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무리로 경제성장의 중대한 적(敵)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국가가 생산성을 높이고 변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이익단체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을 통한 생산적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집단행동 논리를 기초로 한 올슨의 역사해석도 주목을 끈다. 세계대전은 참패에도 독일과 일본





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어간 반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영국과 미국은 연평균 2~3%의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패전국들이 경이적인 성과를 이룬 배경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분배동맹들이 패전과 함께 완전히 붕괴한 것이 요인이 됐다. 이에 반해 승전국들은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분배동맹이 독재해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올슨의 해석이다.

올슨의 그런 역사 해석에는 그만의 독특한 이론적 인식이 깔려 있다. 혁명, 전쟁, 파국 등과 같이 안정된 사회를 파괴하는 요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분배 동맹을 해체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활력소로 작용하지만 그런 위기가 없는 안정된 사회는 분배 동맹의 독재로 큰 정부를 불러와 경제를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스탈린의 계획경제가 처음에 성공한 것은 혁명과 함께 강력한 철권통치로 분배 동맹의 특권층(노멘클라투라)이 독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올슨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국유산업에서 번성한 귀족층이 정부 관료와 담합해 최고지도부의 권력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것이 결국 공산당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의 체제 전환이 어려웠던 점도 그런 분배 동맹의 존속 때문이지만 중국이 개혁에 성공한 건 기득권 세력인 분배 동맹이 문화대혁명 기간 중 근절됐기 때문이라고 올슨은 목소리를 높였다.

소련 계획경제의 흥망에 대한 올슨의 해석은 분배 동맹이 창궐하지 않았더라면 소련 경제는 성공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가 '변영의 길'이라는 올슨 자신의 주장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획경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없고,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와 같은 경제계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멘클라투라가 번식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련 경제는 무너졌을 것이라는 게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인식이다. 올슨은 변영을 위해 독재 정부보다 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민주적 다수도



일인 독재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권위주의 정부라고 해도 경제적 자유를 증시하는 독재라면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간과한 듯하다.

울슨 사상의 힘

그러나 그는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집단행동 이론을 개척해 이익집단의 본질과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지속적인 경제번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번영의 지름길은 자본, 자원, 인구가 아니라 시장경제임을 강조하고 이익단체가 번영의 적이라고 개탄하는 울슨의 사상은 매우 소중하다. 일본 미국 등 오늘날 선진국들의 경기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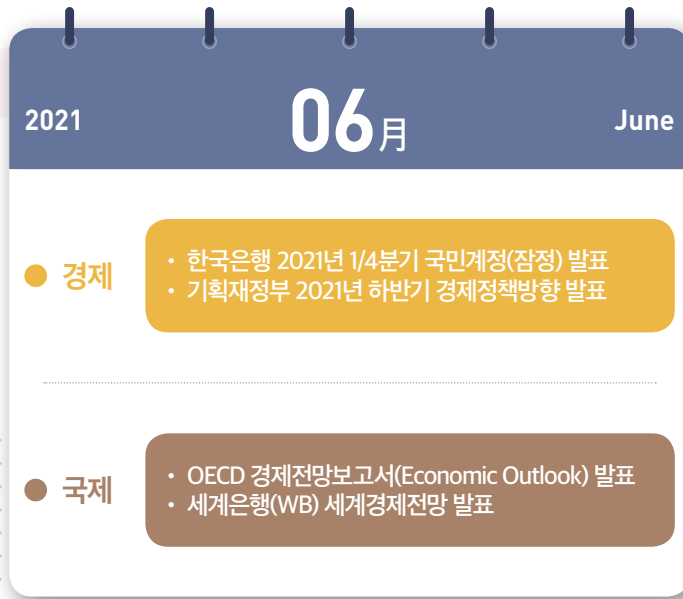
울슨의 사상이 탁월함을 인정한 인물은 누구보다도 하이에크가 대표적이다. 그는 현대사회의 진정한 착취자는 그룹충성심으로부터 권력을 도출해 민주주의를 부패시킨 이익집단이라고 한다. 울슨의 사상은 수많은 논점을 촉발해 정치학과 사회학 그리고 공공선택론의 연구 분야를 확대했고 이로써 경제학을 넘어 사회과학 전반의 발전에 대단히 크게 공헌했다.

도 기득권 수호의 그룹 이기주의에서 제도적 동맥경화증 탓이라는 그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울슨의 사상이 탁월함을 인정한 인물은 누구보다도 하이에크가 대표적이다. 그는 현대사회의 진정한 착취자는 그룹충성심으로부터 권력을 도출해 민주주의를 부패시킨 이익집단이라고 한다. 울슨의 사상은 수많은 논점을 촉발해 정치학과 사회학 그리고 공공선택론의 연구 분야를 확대했고 이로써 경제학을 넘어 사회과학 전반의 발전에 대단히 크게 공헌했다.

울슨의 사상은 하나의 학문적 성장산업이 됐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개국 언어로 번역된 그의 저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경제사학계를 휩쓸었고 또 국가정책에 관한 최우수 저서로 미국 정치학회의 유명한 캐머리(Kammerer) 상을 받았다.

Financial *Calendar*



January 01

재정

- 2022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February 02

재정

- 2020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0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재정

-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재정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통계청 2021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IMF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August 08

재정

- 2022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 통계청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재정

- 2022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ADB 2021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 (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 발표

□ 2021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기획재정부, 5.17.)

- 2021년 1/4분기 기준, 대외채무는 5,659억불로 전분기 대비 210억불 증가, 대외채권은 1조 307억불로 전분기 대비 29억불 증가했으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4,648억불로 전분기 대비 180억불 감소

□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5.20.)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4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4% 증가,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1.9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했으며,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87.3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 감소

□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정부, 5.27.)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주제로 ① 하반기 재정 정책 방향 ②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 ③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논의

April

04

May

05

June

06

재정

- 2020년 결산검사 의뢰(기획재정부→감사원)

경제

-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 결과 발표
-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 ADB 2021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발표

재정

- 2022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사→기획재정부)
- 2020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0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

-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October

10

November

11

December

12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재정

-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경제

-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

- 2022년 예산 확정

경제

-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1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01

한국재정정보원, 개발도상국 경험 전수를 위한 온라인 초청 연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세계은행(W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의 협업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국가 재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초청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총 4일간 '개도국 재정시스템 현황 공유 및 개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총 50여 개국 400명 이상의 재정 담당자가 참여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차세대 dBrain의 혁신적 변화와 정보보호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고, 르완다, 앙골라 등 11개 국가는 자국의 재정정보시스템(FMIS)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재훈 원장이 온라인 초청 연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dBrain에 대해 참가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집중됐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제 온라인 세미나를 적극 확대하고 오는 9월 중남미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2차 온라인 초청 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02

한국재정시스템 코로나19 대응 과정 SSCI 저널에 등재

한국재정정보원이 코로나19에 맞서 디브레인(dBrain) 운영업무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논문이 SSCI 저널에 실렸다. 디브레인(dBrain)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500조원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국가재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며, 하루 이체금액만 9조원대에 이른다. 재정정보원은 30일, 국제저널 『Public Money & Management』가 정보원 정성호 연구위원의 논문 『K방역과 재정시스템』의 등재를 확정하고, 이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2022년 1월 저널 인쇄본에도 실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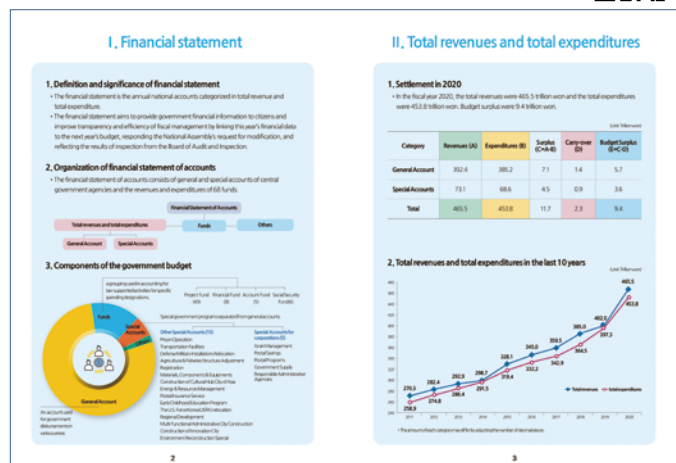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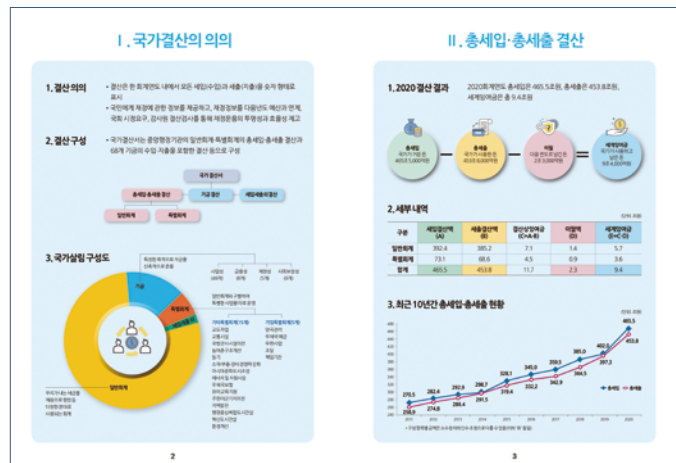
『Public Money & Management』은 영국 공공부문 회계사협회(CIPFA)가 발행하는 SSCI 저널이며, 사회과학 중에서도 공공재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 쉬운 국가살림

“1,500쪽 국가결산보고서를 14쪽으로 요약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에게 읽히는 결산보고서 요약본을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정보 공개

세입/세출, 재무제표, 국유재산, 물품, 채권, 결산보고서 등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재정> 사진인증 이벤트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cho*****@naver.com
vv*****@hanmail.net
woo*****@yahoo.co.kr
cho*****@daum.net
wcr*****@hanmail.net
tra*****@naver.com

사진인증 및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응모 기간 2021.6.23. ~ 7.12.



독자편지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지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책에서만 배웠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해 당시의 분위기를 좀 더 다각도로 알 수 있었네요. 나라의 세출과 세입이 어디에 분포되는지도 재미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좋습니다.

tra*****

월간 <나라재정>은 개인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